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9~2010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9~2010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9~2010

인 쇄 2009년 12월
발 행 2009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 늘품플러스 (070-7090-1177)

인쇄처 (주) 세원문화사 (02-2265-1141)

가 격 7,000원

©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 2009~2010 / 통일연구원 [편].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 cm. -- (연례정보보고서 ; 2009)

ISBN 978-89-8479-539-6 93340 : ₩7000

통일 환경[統一環境]

남북 관계[南北關係]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9004222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9~2010 ▶▶▶

목 차

I. 동북아정세	1
1. 총론	3
가. 기조	3
나. 북한 비핵화 전기 마련	4
다. 양자관계의 조정 지속	6
라. 한·중·일 지역협력의 강화	7
2. 동북아 안보정세	8
가. 세계경제위기와 ‘미·중 G2 시대’ 개막	8
나. 미·일 신정부 간의 갈등	12
다. 한·중·일 3국관계의 발전	16
라. 2010년 전망	17
3. 북핵문제	21
가. 2009년 정세 평가	21
나. 2010년 정세 전망	24
4.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26
가. 한·미관계	26
나. 한·중관계	35
다. 한·일관계	39
라. 한·러관계	43

Ⅱ. 북한정세	49
1. 총론	51
가. 2009년 정세 평가	51
나. 2010년 정세 전망	53
2. 대내정세	55
가. 정치동향	55
나. 경제동향	60
다. 사회동향	66
라. 군사동향	71
3. 주요 대외관계	77
가. 북·미관계	77
나. 북·중관계	80
다. 북·일관계	84
라. 북·러관계	87
4. 대남동향	92
Ⅲ. 남북한관계	97
1. 총론	99
가. 남북대화	99
나. 2010년도 인도주의 사안 전망	102

2. 남북회담	106
가. 남북정상회담 및 장관급회담	106
나. 남북대화	108
다. 경제분야회담	111
라. 군사분야회담	116
3. 남북교류협력	122
가. 경제분야	122
나. 사회·문화교류분야	125
4. 인도주의 사안	128
가. 대북지원	128
나. 이산가족 문제	130
다. 북한이탈주민 문제	135
라. 북한인권	139
부록: 2009년 주요 사건일지	145

I

동북아정세 ...



1. 총론

가. 기조

(1) 새로운 경제안보질서의 모색

2010년 세계경제는 회복기조와 위기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각국은 자국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발전을 위해 국제 공동 대응 및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역내 국가 간 안보관계에서는 견제보다는 협력이 좀 더 확대되면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의 과도기적 특징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양자관계 위주 및 미·일동맹과 중·러의 상하이협력기구(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간의 느슨한 견제구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동북아 안보질서가 모색될 것이며,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틀 속에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이 규정될 것이다.

(2) 주요국 전망

미국은 대내적인 의료보험제도, 교육개혁 문제와 11월 중간선거에 대비, 중동문제 해결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동북아지역에서는 기존 한국·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과 분담을 요구하는 조정자 역할에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일, 미·중·일 소(mini)다자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은 대내안정 및 고도성장(8~9%)의 유지를 위해 경제협력을 통한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동북아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책임대국 역할을 강화하면서 6자회담 등 동북아지역의 주도권 및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것이다.

하토야마 일본 정부는 대등한 대미 관계 정립과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이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나, 내년 7월 참의원선거 등 안정된 정국운영을 고려해 커다란 변화를 추구하는데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도 경제회복 및 블라디보스톡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2012)의 준비를 위해 동북아의 세력 균형 참여를 통한 영향력 회복에 주력할 것이다.

나. 북한 비핵화 전기 마련

2010년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미국은 2010년 4월 ‘핵안전보장정상회의’와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성사시키기 위해 내년 초 미·북간 후속대화를 최소 2~3차례 이상 추진할 것이나, 대북제재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two track approach)을 고수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 협상전략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일괄타결을 목표로 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즉,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 이와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내용의 대북협상 방안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상반기 미·북대화에 이은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를 안정

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적·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중국은 경제회생을 희망하는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양자 및 3자 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만일 미·북대화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중국은 6자회담의 유지를 위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수행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김정일의 방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내년 상반기 중 미·북간 북핵 폐기, 북한 체제보장, 대북경제지원 등 큰 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한·미 양국은 일괄타결 협상방안에 북한이 호응하도록 일본·중국·러시아 등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만일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면 한·미 양국은 대북 경제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6자회담의 유지와 북핵해결의 진전을 위해 신의주·나선지역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일본은 미·북/남북관계의 진전에 맞춰 북한과 남치문제를 포함한 북·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논의와 교섭을 수면아래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주장하고 대북 경수로 제공 등 6자회담에서 일정한 역할을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 의지, 관련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한 6자회담의 결렬과 회담 재개 등이 몇 차례 반복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양자관계의 조정 지속

(1) 미·중 전략적 협력 강화

중국의 역할을 중시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전략과 안정적인 성장을 통한 부상을 시도하려는 중국의 이해가 맞아 미·중 협력관계는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중간 선거결과 및 위안화 절상, 무역마찰 등 미·중갈등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세계경제위기·핵안정보장정상회의·북핵·에너지·기후환경 등 세계 및 지역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사안별로 협조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2) 미·일동맹 조정

하토야마 정부의 출범 후 촉발된 전통적인 미·일 동맹관계에 대한 조정은 지속될 전망이다. 오키나와 후텐마 미 해병대 비행장 이전문제, 핵밀약문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일본 시설 사용문제 등 양국 간 현안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미·일동맹 조정에 대한 일본 국내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동맹외교의 기축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쟁점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관계를 조정할 것이다.

(3) 중·일협력 가속화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중·일관계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중국은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넘어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수준으로 양국관계를 확대하려 할 것이다. 다만 동아시아 협력의 주도권 갈등, 미·중관계의 영향 등을 감안 미·중·일 전략대화가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라. 한·중·일 지역협력의 강화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증대된 한·중·일 3국의 협력은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실질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자 또는 3자간 FTA 논의도 재개될 것이며,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틀 속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은 6자회담을 비롯한 지역 안보 현안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될 G-20 회의와 3국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양자 및 3자 간 FTA 체결, 3국 간 신뢰구축, 동아시아공동체 비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병곤·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위원

2. 동북아 안보정세

가. 세계경제위기와 ‘미·중 G2 시대’ 개막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 안보질서는 1996년 형성된 ‘미·일 대 중·러’의 견제구도가 2004년 호주의 미사일방어(MD)체제 가입을 계기로 ‘미·일·호 주 대 중·러·상하이협력기구’(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견제구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부실사태로 인해 2007년 초부터 금융위기를 맞았고, 이는 전 세계 국가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침체상태에 빠졌다(2008.9). 이후 각국은 시장의 유동성 확보와 자국 경제의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 결과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나 전례 없는 거시경제와 금융 정책 지원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GDP의 5.5%에 해당하는 7,870억 달러 규모의 최대 재정지출을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서 주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주택경기와 소비침체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EU는 GDP 1.5%에 달하는 2,000억 유로 규모의 경기회복 대책을 운용하였다. 이 결과 2009년 2/4분기부터 내수 및 수출의 개선으로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완화되고 소비자신뢰지수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경기대책으로 총 75조 엔의 금융지원 및 재정지출을 시행하였다. 수출이 소폭 개선되면서 2009년 2/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경

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다. 중국경제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009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6.1%까지 하락하였으나, 3월 들어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수출 감소세도 진정되면서 경기가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신흥시장국의 경기 개선도 당초 예상되었던 것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출범(1.20)한 오바마 미국 민주당 행정부는 금융시스템 안정화와 세계경제 회복을 대내외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안게 되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전의 종결,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알카에다 세력의 격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강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한 핵군축 등의 대외정책 과제를 갖고 있다.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과 일방주의적인 대외정책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대외정책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스마트파워’(smart power)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파워란 군사력·경제력으로 구성된 하드파워(hard power)와 문화·가치·아이디어를 통해 자발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접목한 현명한 외교정책을 의미한다. 동북아지역과 관련, 오바마 행정부는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는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강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아소 자민당 정부는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역내 주도권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중의원 해산(7.21)과 총선(8.30)을 통해 새로 집권(9.16)한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는 ‘21세기 국제지도국’을 지향하면서 대등한 미·일 관계, 중국과 전략적 협력 강화, 동아시아공동체 추진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정부는 2020

년까지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의 실현을 중기목표 그리고 2050년까지 ‘사회주의현대화’의 실현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중국은 ‘평화발전’(和平發展)을 내세우고,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방위외교를 추진하면서 다자주의 전략을 구사해 왔다. 특히 중국은 세계경제위기를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responsible stakeholder)의 역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파악하고 자국의 역내 영향력 및 발언권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정부는 2025년까지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하고 이 지역을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태경제권에 편입시키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 심도있고 잘 균형된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미국과 대량살상무기(WMD)확산·테러 방지를 위한 협력 및 건설적 대화 추진, 일본과 새로운 차원의 관계 확립 등을 위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와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상기와 같이 동북아 주요 4국의 대외정책 목표와 내용들이 상당히 변화되었고, 이는 동북아 역내의 안보역학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미·일 대 중·러’라는 견제구도로부터 ‘미·일·호주 대 중·러·SCO’로 확대되었던 견제구도가 상호 견제 면보다는 협력 면이 부각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방문지로 일본을 방문(2.17)하고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표명하였다. 또한 북경을 방문(2.22)하여 중국과 세계금융위기, 기후변화, 국제안보문제 등에서 미·중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

고, 인권문제가 양국관계 개선에 장애요인이 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의 상대로 아소 일본 총리를 선택하여 워싱턴에서 정상회담(2.24)을 개최함으로써 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4.2)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기존의 고위급 대화와 전략적 경제대화를 통합하여 새로운 협의기구를 만들고 전략대화의 수준을 격상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워싱턴에서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개최(7.28~29)되었다. 클린턴 국무장관과 다이빙귀 국무위원이 논의한 전략협상에서는 주로 북핵문제,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국제 및 지역 이슈가 논의되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협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방안, 균형성장 확보,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와 관련된 이슈가 논의되었다. 양국은 이 회의에서 세계의 도전적인 난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9·11 테러와 금융위기 사태로 국력이 약화된 미국과 성공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력이 급신장한 중국이 이와 같이 정책 사안별로 협조하는 ‘전략적 협조’ 노선을 추구함에 따라서 국제질서에서는 ‘미·중 G2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군사현대화를 경계하고 있으며, 공정무역을 강조함으로써 무역마찰을 겪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5.25)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에는 찬성(6.12)했으나 개별국가 차원의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러 양국도 기존 관계를 재설정하여 양국 공통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메

드베데프 대통령과 미·러 정상회담(7.6)을 개최하고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의 후속 협정을 위한 초안의 양해 각서에 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와 재건을 위해 러시아가 자국 영토를 이용한 미국의 무기, 군사 장비, 병력 이동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군사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그 후 미국은 MD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폴란드에 요격미사일, 체코에 첨단레이더망 기지 설치 계획 등을 철회할 의사를 표명(9.17)하였고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란 핵개발을 추가적으로 제재하는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에는 찬성했으나 개별국가 차원의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나. 미·일 신정부 간의 갈등

2009년 미·일관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을 아소 일본 전 총리와 개최하고, 클린턴 국무장관도 취임 후 일본을 첫 번째로 방문하여 전통적인 미·일 동맹관계가 강화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일본 중의원 총선거(8.30)에서 자민당이 패배하고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이 출범(9.16)하자, 지금까지 강력하게 결속되어온 미·일 안보동맹이 이완될 수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는 등 미·일 신정부 간 갈등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하토야마 정부가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미·일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양국 간 갈등 사안은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미 해병대 비행장 이전문제, 핵 밀약 문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일본 시설 사

용문제 등이다.

후텐마 비행장 이전문제는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灣)시에 있는 이 비행장을 2014년까지 같은 현 나고(名護)시 주일미군 슈와브 기지로 옮기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다. 자민당 정권 시절 미·일 양국은 주일미군 재편 계획의 하나로 슈와브 기지의 해안부에 V자형 활주로를 건설해 후텐마 비행장의 수요를 충당하고, 동시에 후텐마 비행장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원 8천명은 팜으로 이동시키기로 합의(2006.5)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민주당·사민당·국민신당 연립정권의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 이전부터 “오키나와 현민의 의견을 중시하겠다”며 현외 이전 추진 입장을 명확히 했고, 사민당 당수인 후쿠야마 소비자담당상도 수시로 현내 이전은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 측은 “중전 합의를 준수하라”면서 오바마 대통령 방일(2009.11.13~14)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시일이 촉박하다”면서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로써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는 양국 간 최대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조기 결론’에 합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연내 결정해 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거부(12.3)하고 2010년에 시간을 갖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미국은 201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50주년을 맞이해 ‘미·일동맹 강화의 심화’를 노력하는 협정의 연기를 일본에 통보했다. 또한 이전처를 둘러싼 검증 기관으로써 미·일 간에 설치(11.17)한 외무·방위당국 각료급회의의 협의도 중단되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한 결론 도출을 2010년 5월까지 유보하기로 결정(12.15)하였다. 이 결과 양국 정부 간의 균열은 한층 더 심각해졌다.

핵 밀약은 「미·일 안보조약」(1951년 체결, 1960년 개정)에는 미국이

일본으로 핵무기를 반입할 때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지만 양국 간 밀약에 따라 ‘핵무기 탑재 함선, 항공기의 영해 통과, 기항, 비행’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동안 밀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언이 여럿 있었지만 이를 인정하면 「미·일 안보조약」이 문제시되고 핵무기의 제조·보유·반입을 금지한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에 자민당 정부는 일관되게 밀약의 존재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하토야마 정부 출범이후 핵 밀약설을 조사해온 일본 외무성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 군함·항공기가 일본에 기항하거나 통과하는 것을 묵인하는 밀약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보도(11.22)하였다. 핵 밀약을 기록한 의사록은 1959년 후지야마 당시 외무장관과 맥아더 2세 주일 미국대사가 서명했고, 외무성 북·미국과 조약국이 비밀리에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카다 외무장관은 “외부 전문가에게 (관련 문서의) 검증을 맡겨 밀약이 왜 필요했는지 등 시대 배경까지 조사해보고 하겠다”며 진위를 분명히 할 예정이다.

또한 자민당 정부의 미·일 밀약을 조사 중인 외무성은 1960년 후지야마 당시 외무장관과 맥아더 2세 주일 미국대사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전투작전행동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협의한 의사록을 발견했다. 의사록에는 ‘주일미군이 유엔군사령부 하에서 바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군사작전에 일본이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주일 미군기지 사용원칙을 정한 「미·일 지위협정」에서는 밀약과 같은 ‘유사시 대처’ 내용은 별도로 없이 「미·일 합동위원회」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자민당 정부는 이 밀약의 존재를 부정해 왔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미군의 출동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 유사시 미·일 방위협력이라는 현재의 양국 관

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하토야마 정부가 밀약에 대한 재협의를 시도하면 한반도 안보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 일본 외무성이 조사 중인 밀약은 1972년 오키나와 반환시 핵반입 약속과 토지 원상복구 비용의 일본측 부담 등이다.

상기와 같은 밀약들의 조사와 관련, 하토야마 정부는 이것이 과거를 규탄하려는 작업이 아니며 어떠한 정치 조건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다만 사실을 확실히 밝혀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외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일본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의 안보정책 브레인인 데라시마 「일본총합연구소」 회장은 미국 방문(11.28) 시, 미국 무부가 사전에 현직 간부와는 만날 수 없다는 방침을 통보해 주요 인사를 만나지 못했다. 오카다 외상과 기타자와 방위상, 루스 주일 미국 대사 간의 3자회담(12.4)에서 루스 대사는 미·일 정상회담(11.13)시 후텐마 비행장 이전문제와 관련 하토야마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말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배신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카다 외상은 “강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뒤 하토야마 총리에게 조기 결단을 요청(12.6)하였다.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12.7~18)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협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주요국 정상 대부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하토야마 총리에게는 걸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하토야마 정부를 사실상 소외시키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하는 위기감이 일본 내에 확산되고 있다.

다. 한·중·일 3국관계의 발전

최근 동북아 역내에서는 한·중·일 3국 관계가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괄목할만하게 발전되고 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ASEAN +3(한·중·일) 정상회의 시 일본 오부치 전 총리의 제의로 최초로 개최된 이후 정례화 되었다. 2007년 한·중·일 정상회의의 별도 개최 합의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및 아소 일본 전 총리는 후쿠오카에서 3국 별도의 제1차 정상회담(2008.12.13)을 열고 3국 현안과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3국간 협력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2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2009.10.10)는 중국 베이징에서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일본 총리 간에 개최되었다. 3국 정상은 한·중·일 협력, 북핵문제, 국제 경제 및 금융상황, 기후변화 대응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1999년 최초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이후 3국 협력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한·중·일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또한 3국이 경제성장과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도 채택하였다. 특히, 3국 정상들은 이날 ‘한·중·일 협력 사이버사무국’(http://www.tccs.asia)을 개설하고 대학 간 교류 활성화 및 청년 예술가 대화체 설립을 추진키로 하였다. 3국의 경제인들이 교역·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1차 Business Summit을 개최하였고 항공안전 분야의 협력 강화, 수자원 관리방안 협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체 신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 국제적 금융·경제위기 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제2차 3국 정상회

의는 제반 분야에서의 3국간 실질협력 강화,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상호이해 심화, 3국 정상간 신뢰 증진의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3국 정상은 2010년 제3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기로 하였다.

베이징 제2차 3국 정상회의 이후에도 3국 협력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 이후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시되고 있는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한국 및 일본의 베이징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12.12)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아시아 공동체가 조기에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도 같은 날 서울의 한 대학 강연에서 불행했던 과거사를 사죄하면서 “중국과 한·일 양국, 3국이 신뢰를 토대로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도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 간, 권역 간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유럽은 『리스본조약』 발효(12.1)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이 법인격을 갖게 되었고, 남미는 남미시장공동체(메르코수르) 그리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연합(AU)을 중심으로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이에 비하면 동아시아는 타 지역들보다 늦게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2010년 전망

2009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는 침체 상황을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나 안정화로의 길은 평탄치 않으며 경제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어 세계경

제(GDP) 성장률이 2009년 -1.1%, 2010년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공공개입 때문에 금융 여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개선되었으나 세계경제 침체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느린 속도의 회복이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미국은 노동과 주택 시장의 개선, 산업생산의 회복세, 경영과 소비자 신뢰의 개선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009년 -2.7%, 2010년 1.5%로 각각 전망된다. 유로지역에서는 소비자와 경영의 조사지표들이 회복되고 있으나 실질 활동 관련 자료들은 안정화에 대한 징후를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더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2009년 -4.2%, 2010년 0.3%로 예상된다. 일본은 생산의 안정화, 소비자 신뢰 개선, 적극적인 금융정책 등으로 2009년 -5.4%로 전망되는 경제성장률이 2010년에는 1.7%로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적 부양책과 기대치보다 더 신속한 자본흐름의 전환 등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8.5%에서 2010년 9.0%,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2.4%에서 2010년 3.6%로 각각 전망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최악의 침체 상태를 벗어났으나 미약한 회복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북아 역내 주요국들은 자국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발전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오바마 행정부는 이외에 대내적으로 의료보험제도·교육개혁 문제 등을 해결하고 11월 중간선거를 준비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이란 등 중동문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하토야마 일본 정부는 대등한 대미 관계 정립과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이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체제의 새로운 통치이념인 ‘사회주의 조화사회론’이 세계경제위기 이후 탄력을 받고 있다. ‘사회주의 조화사회론’은

전 세계차원에서 ‘조화세계’(和諧世界)의 건설, 주변국에 대해 ‘조화로운 아시아’(和諧亞洲)의 건설, 국내차원에서 ‘조화사회’(和諧社會)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도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주력하는 등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아태경제권으로의 편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동북아 역내 국가 간 안보관계에서는 견제 면보다는 협력 면이 좀 더 확대되면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의 과도기적 특징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중 양국은 제2차 전략경제대화과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세계 경제위기·북핵과 미사일·국제테러·에너지·기후환경·신종플루 등 국제 문제들과 위안화 절상·무역마찰 등 양국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사안별로 협조하는 ‘전략적 협조’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관련 국들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북한의 핵보유 의지, 미·북 간의 입장 차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지원 등 때문에 북핵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이 관련국들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북핵문제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하토야마 일본 정부는 대등한 대미 관계를 지향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부분적으로 갈등을 빚을 것이나 미·일동맹이라는 외교의 기축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미·일동맹의 기본 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양국은 쟁점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될 G-20 회의와 3국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 북핵문제의 평

화적 해결, 양자 및 3자 간 FTA 체결, 3국 간 신뢰구축, 동아시아공동체 비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인곤 ·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3. 북핵문제

가. 2009년 정세 평가

2009년 전반기에는 “남한 때리기”와 “미국 시선 끌기”를 두 축으로 해서 전개된 북한의 파상공세로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높아졌다. 2008년 한 해 6·15, 10·4 선언의 이행을 요구하며 이명박 정부를 압박했던 북한은 2009년 들어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2009년 1월 30일 조평통이 ‘남북간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화’를 선언했고(조선중앙통신, 1.30), 1월 17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포했으며(조선중앙통신, 1.17), 보름 뒤인 2월 2일 남한과 동북아 주둔 미군의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핵을 폐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조선중앙방송, 2.2). 이후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직원을 구금했고,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6자회담을 거부했으며, ‘개성공단 계약 무효화와 폐쇄 가능성’까지 통보했다.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는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했다.

2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를 복원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이후 노골화되었다. 4월 14일 북한 외무성은 의장성명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6자회담을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불능화되었던 핵시설을 원상 복구함과 아울러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 4.14). 4월 29일 외무성대변인 성명도 유엔의 제재

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위적 조치의 일환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조선중앙통신, 4.29). 5월 8일 외무성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부시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실망을 표시하면서 “이미 밝힌 대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 5.8). 핵실험 1주일 전에는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¹ 2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강력하게 대응했다. 중국의 온건한 입장으로 다소의 진통이 있긴 했지만 한국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를 채택한 것이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비해서 훨씬 강화된 결의안 1874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내용으로 되어 있다: ① WMD와 미사일의 수출입 통로를 차단하는 선박·항공기 검색, ② 무기개발 자금줄을 끊는 금융제재, ③ 소형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의 대북한 수출입 금지. 이미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핵심 인물과 기업에 대해 해외자산 동결과 여행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결의안 1874호는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과 항공기 가운데 WMD 및 관련 물자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차단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적용을 제도화했다.

2009년 후반기에는 북·미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상황이 다

¹ Michael Mullen, *The Future of Global Engagement*,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May 18, 2009), pp. 38~39.

소 호전되고 있다. 2009년 7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미국과의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흘 뒤인 7월 27일 북한은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6자회담을 거부하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 방식은 따로 있다”면서 우회적으로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했다(조선중앙통신, 7.27). 국경침범 혐의로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한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면담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방북결과를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여러 차례 브리핑했고, 2009년 8월 18일 백악관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1시간 10분 동안 만나서 방북결과를 직접 설명했다(연합뉴스, 8.19). 12월 초에는 보스워스 특사의 평양 방문이 성사되어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최초로 북·미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졌다.

한편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서 소위 ‘그랜드 바겐’을 제의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연합뉴스, 9.21).² 그랜드 바겐의 기본 개념은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이 (핵을)포기하면 원하는 것이 뭔가 확인해서 협상을 하자는 것으로서(중앙일보, 11.5),³ 한국이 큰 원칙을 제시하고 그 내용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협의해서 구체화하는 구도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11.6).⁴

² 2009년 9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미국 외교협회,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오찬연설.

³ 2009년 11월 4일 이명박 대통령 EIU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

⁴ 2009년 11월 6일 이명박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자문단 조찬간담회 발언.

나. 2010년 정세 전망

2010년의 북핵문제는 상당 부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이에 기초한 북·미대화의 전개방향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이 만족스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북한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고 분명한 선택을 요구해왔다. 2009년 12월 초 북한산 무기를 실은 그루지아 국적의 화물기를 태국에서 검색·차단한 사건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미국의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고, 미국은 2010년에도 같은 기초를 견지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저지른 나쁜 행동을 보상하는 구태의연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북·미대화도 6자회담을 열기 위한 조건부 회담이라는 점을 고수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게이츠 국방장관은 “같은 말을 두 번 시는 것에 지쳤다”고 말하면서 ‘핵포기’라는 같은 카드를 사용해서 대가를 얻어내려는 북한정권의 전략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⁵ 오바마 행정부는 워싱턴 DC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영변을 “세 번 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5.29). 오바마 대통령도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2009년 6월 6일 “우리는 도발에 대해서 보상하는 정책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⁶

⁵ Blaine Harden, “N. Korea seen moving missile to launchpad,” *Washington Post*, May 31, 2009.

⁶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fact, we are not intending to continue a policy of rewarding provocation.”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Sarkozy of France in Press Availability*,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June 6, 2009, <<http://www.whitehouse.gov>>.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2010년 초부터는 대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10월 이근 북한 외무성 국장의 미국 방문에 이어 12월 초 보스워스 대북특사의 평양 방문으로 시작된 북·미 고위급 접촉은 본격적인 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에는 한국이 제의한 그랜드 바겐을 둘러싼 논란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이 원칙적으로 그랜드 바겐 구상에 동의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 제안을 일축한 만큼(연합뉴스, 9.30; 조선중앙통신, 9.30), 북·미, 남·북·미, 6자회담 등 각종 대화에서 그랜드 바겐을 둘러싼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미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수록 협상에 의한 북핵포기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 김정일 정권 하에서 핵폐기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은 제2차 핵실험 이후 대두된 적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핵폐기 의지를 시험하는 것을 북·미대화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김정일의 강력한 핵보유 의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만큼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강해지면서 대북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성훈 ·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4.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가. 한·미관계

2009년 1월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세계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서 G-20 정상회의 등 국제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상 타결('07.6.30) 이후 양국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현재까지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1.20) 직후 북한은 도발적인 외교공세를 취하며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였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면 “핵 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2.2)하였다. 그러나 클린턴 국무장관은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지속 추진,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병행 추진 등을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2.13)하였다.

국제적 관심이 북한 미사일 문제에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2.20)한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국무장관은 북핵문제 해결 및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 런던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4.2)하여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고 6자회담을 통한 검증가능한 북한 핵폐기가 한·미 간 공동목표임을 재확인하였다.

북한은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4.5)하였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4.13)했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5.25)하자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참여를 발표(5.26)했다. 그 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며 양자간 협의를 긴밀히 진행하였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8차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게이츠(Robert M. Gates) 미 국방장관의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5.30)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특히 한반도 안전 보장을 위해 핵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제공 등 유사시 한반도 방어 공약을 확고히 지킨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양측은 또한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회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환 과정에 반영기로 했다. 한편,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국무부 부장관, 레비(Stuart Levey) 재무부 차관,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대북특사 등 미 정부대표단이 한국을 방문(6.2~5)하여 북한의 의도 및 내부 정세 평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행위 대응방안,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결의 1874호를

채택(6.12)하였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공조방안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6.16)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2차 핵실험 등 도발적 행동에 대해 확고한 한·미 공조체제에 기초하여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하였다. 아울러 이번 정상 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공표하였다.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과 합의(’08.4.19)한 ‘21세기 전략동맹’을 한 차원 더 높게 구체화한 것으로서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위주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으로 확대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하고,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추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위협을 제거한다는 내용의 ‘확장 억지’ 개념을 명문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공고한 결속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또한 경제·무역·투자 협력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며, 한·미 FTA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아울러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해적, 조직범죄와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 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등과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주도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였다. 캠벨(Kurt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7월 18일 한국을 방문해 대북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two track approach)을 대북정책의 골격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한국 등 동맹국들의 승인 없는 한 포괄적 패키지를 북한에 제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 양측은 2009년 8월 17~27일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실시하였다.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여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주도하는 이번 연습은 미국 한국사령부가 지원해 지휘소 연습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응용력을 검증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한·미 간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다양한 군사 협조 기구를 편성·운영하고 전시 증원 절차를 숙달하였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발전시키고 있는 각종 계획을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보즈위스 대북특사는 북한과의 대화재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9.6)하여 북한이 최근 일부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미·북대화는 6자회담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북한간 양자대화가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의 일괄타결을 제의하였다.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및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하

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외교협회 등이 주관한 간담회(9.21)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 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날 클린턴 국무장관과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공조에 필요한 원칙들에 합의했다. 한편,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정부대표단은 한국을 방문(9.29~30)하여 핵폐기에 관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였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에 단호하지 못하면 우리가 핵확산을 묵인한다는 신호를 전세계에 줄 수 있다”며 “북핵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핵비확산체제와 관련해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우리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개최(10.22)된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등 한·미동맹 현안을 점검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유연한 미국의 증강배치와 한국군의 보완 전력 제공 등을 포함한 1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강조하고,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게이츠 국방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한·미동맹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지역 및 범세계적으로 협력적 관계 발전 및 다자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한 기존 합의된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일정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기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11.19)하고 핵우산과 확장억지력을 포함한 공고한 한·미 안보태세를 재확인 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 지지 견해를 밝히고, 북 핵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12월 8일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북한에 파견해 미·북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양국에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FTA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 산업이 한·미 FTA 타결에 걸림돌이 된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기 위해 6·25 전쟁 발발 60년인 2010년에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만나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2+2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기후변화·녹색성장·핵비확산·대테러 등 범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행이 한·미 간 북핵정책 조율을 위해 방한(12.6)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면담을 갖고 미·북대화 의제와 방향을 사전조율했다. 그리고 오산 공군기지에서 특별전용기로 평양을 방문(12.8~10),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 미·북간 현안들을 논의했다.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산 공군기지로 귀환한 보즈워스 대표는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의 필요성과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대해 북한과 공통의 이해 관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12.10). 하지만 “북한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에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50명 이내의 국군을 파견하는 내용의 파병동의안을 확정·발표했다(12.8). 파병 병력은 이곳에서 재건활동을 펼칠 민간인 지방재건팀(PRT) 요원 100명과 경찰 40명을 보호할 계획이다. 지방재건팀은 파르완주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 보건·의료 지원, 농업·농촌 개발, 교육·직업훈련, 경찰훈련 등 5개 분야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010년 전망

미국은 2010년 4월 12일 워싱턴에서 ‘핵안전보장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핵물질의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핵안전보장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성사시키기 위해 내년 초 보즈워스 방북에 따른 미·북간 후속대화를 적극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젠’ 협상전략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일괄 타결을 목표로 한 한반도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즉,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 이와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내용의 대북협상방안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한·미 양국은 일괄타결 협상방안에 북한이 호응하도록 일본·중국·러시아 등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에 합의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제재는 지속해 나갈 것이다. 만일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면 한·미 양국은 대북 경제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이 재개되어도 난항을 겪게 되면, 한·미 양국은 1874호를 비롯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더욱 강력히 이행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0년 한국과 미국은 대북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에 입각한 정책조율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핵우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확장 억지’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상황에 대비한 합동군사연습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다. 2010년 을지프리트미가디언 훈련에서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주도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 양국은 유사시 미 증원전력 가용성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대량탈북 사태 등을 고려한 급변사태 대비책도 보다 체계화시킬 것이다.

6·25 전쟁 발발 60년을 맞이하여 한·미 양국은 외교·국방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동맹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2+2협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양자 차원의 현안은 물론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대량살상무기확산,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미동맹 공동비전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서 전략동맹의 발전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과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2010년 상반기에 양국의 경제·통상관련 실무자들은 FTA 진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특히 한·미 FTA의 자동차 부문에서의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추가협상을 통하여 타협안이 마련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0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적극성을 보이게 될 지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 또는 농업기반 지역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통상 문제의 처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또한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G-20 세계금융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제 설정, 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외교적 경험 및 협상기술을 한국에 전해 줄 것이다. 한편, 한국은 G-20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

의 공동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G-20 금융정상회의에서의 협력은 한·미동맹이 21세기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 김국신·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한·중관계

2009년의 한·중관계는 세계금융위기 하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다진 한 해로 평가된다. 작년 5월 한·중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시킬 것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상호 이해와 신뢰의 부족, 대북정책 및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해법 상에서의 이견 노정 등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다. 2009년 한·중 양국은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과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2009년 2월 유명환 외교부통상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2.24~25)하여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한·중관계 발전방향, 6자회담 및 북한문제, 금융·경제통상 협력증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이 포함되었다. 이어 중국공산당 권력 서열 5위인 리창춘(李長春) 정치국상무위원이 방한(4.4~7)해 고위급 인사교류 유지, 정치신뢰 증진, 금융위기에 공동 대응, 인문교류 확대, 전략대화 및 다자협력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특히,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유력시되

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연내 방한(12.16~19)이 성사됨으로써 양국관계의 진전을 위한 고위급 인사 교류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밖에도 장메이잉(張梅穎)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4.20~24), 허용(何勇)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8.20~24) 등의 방한이 잇달아 성사되었고, 안경을를 한나라당 사무총장(5.5~9), 한승수 국무총리(6.12~13), 이운성 국회부의장(7.13~15) 등의 방중이 이루어짐으로써, 양국의 당과 국회 차원의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특사 자격으로 탕자쉬안(唐家璇)이 방한(8.22~23)한 것을 비롯 사천성 지진피해 고아 대표단(5.15~19), 중국청년대표단(6.14~22), 양원창(楊文昌) 중국인민회교화학회 회장(6.15~18)의 방한과 한·중 지도자 포럼 대표단의 방중(8.24~28) 등 양국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교류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경색 국면 하에서 단행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4.5)와 2차 핵실험(5.25) 등은 양국 간의 이해 및 인식 차이를 표출함으로써 양국관계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의 해소를 위한 양국의 협력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선 제2차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4.3, 런던)에서는 한·중관계 발전, 국제금융위기 대응,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 등을 협의하였고, 이어 ASEAN+3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회담(4.11, 태국)에서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북한 로켓발사문제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ASEM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한·중 외교장관회담(5.25, 하노이)과 ARF을 계기로 한·중 외교장관회담(7.2, 푸켓)에서는 남북관계 및 북핵 실험을 비

롯 한·중·일 협력과 UN 안보리 개혁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UN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9.23, 뉴욕)과 제2차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원자바오 총리와의 양자회담(10.10)에서는 북핵문제 한·중·일 협력,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이처럼 국제무대에서 양국의 협력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차원을 넘어 세계적 수준에까지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군사안보분야에서의 협력도 점진적이나마 진전을 보였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한국을 방문(3.25~27)한 중국군 총참모장 천빙더(陳炳德)와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부응하는 실질적 군사관계와 교류·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4월에는 정옥근 해군총장이 중국 국제관함식에 참석하였고 우리 함정이 중국 잔지앙(湛江) 항구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5.26~27)해 중국 량광리에(梁光烈) 국방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핵 실험,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 남북관계 등을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국은 한·중 군사관계가 인사·부대·학술교류, 함정 상호방문 등 초보적 군사교류단계에서 수색구조훈련(SAREX) 등 군사협력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부합되도록 고위급 국방 전략대화 신설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상호 연락체계 강화, 학술단체 간 교류확대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경제 분야에서 양국은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교역액은 한·중수교 이후 최초로 감소되었다.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액

은 약 694억 달러, 대중 수입액은 약 439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은 14.7%, 수입은 34.8% 감소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의 지위를, 한국 역시 중국의 3대 무역상대국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였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 회복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며, 이는 2009년(1월~10월) 중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255억 달러의 흑자가 한국의 전체 무역흑자에서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에도 한·중 양국은 금융위기 공동대응 및 경제협력,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공동이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진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양국의 협력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2010년 불투명한 세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중국경제의 활성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의 회복이 맞물리면서 경제교류·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양국관계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증대되고 있는 양국관계의 교류만큼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역사 인식, 국군포로·납북자를 포함한 탈북자 처리문제, 반한·반중정서, 이 어도, 불법조업 등 양국 간의 잠재적 마찰 문제들이 포함된다.

중국은 홍콩·마카오·대만과의 경제통합 및 동남아와의 FTA를 바탕으로 하는 10+1을 동아시아지역으로 확대하는 10+3을 적극 추진해왔는바, 동아시아지역의 핵심국인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할 것이며, 한·중관계도 이러한 틀 내에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일본과의 경쟁 및 주도권 확보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

과의 FTA 추진을 적극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G2로 명명되는 것을 반기지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책임대국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한·중·일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등 국제무대에서 한·중협력의 기회는 증대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부상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협력관계가 핵 확산 저지와 북핵 폐기, 6자회담 재개과정 등에서의 한·중관계에도 일정한 부담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미·북대화에 이은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이를 둘러싼 한·중간의 입장 조율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한·중 양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목표 상의 차이로 인한 간극에서부터 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 동북아다자안보에 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의제가 증대할 전망이다.

● 전병곤·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위원

다. 한·일관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한·일관계는 중요한 협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세계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한·중, 중·일, 한·중·일 등 양자 및 3자간의 공동대응과 협력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 결과, 2008년 12월, 제1회 후쿠오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의 세계경제위기로의 확산에 대한 3국 공동대응,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 ▲지역내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협의되었고, 2009년 1월에 아소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였다.

2009년 1월 12일의 서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외환·금융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 아프가니스탄의 지원 가능성의 검토를 위한 담당부서간의 협의 등이 이루어졌고, ‘한·일 중소기업 CEO포럼’의 개최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소 총리의 방한에는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회장인 미타라이 후지오 케논 회장을 비롯해 19명의 재계 인사들이 동행하였다.

이처럼, 미국발 금융위기의 세계경제위기 확산으로 인해 한·중·일의 협력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양국 정상의 서틀외교의 활성화에 힘입어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 즉, 세계금융경제위기의 도래에 따른 미국 국력의 상대적 약화, 중국·인도의 부상, 미·중 경제·전략 협력의 강화 등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한·일 협력은 양국 정상의 서틀외교를 중심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전개되었다.

2009년 6월 28일의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5자협회의 필요성 공유, 원자력·과학기술·우주분야 등 첨단분야에서의 일본측 기술지원을 포함한 협력 강화, 한국내 부품·소재산업공단의 일본 기업 진출 지원 요청, 한·일 FTA 교섭 재개 등 양자간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을 뿐 아니라, 기후, 테러, 아프가니스탄 지원 등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특히,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일 정상은 북한의 핵 보유 및 미사일 발사를 용인할 수 없다는 기존의 태도를 거듭 확인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5자협

의의 필요성을 표명하였다.

6·28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사 문제, 독도문제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고 갈등을 초래하기 쉬운 민감한 문제는 배제하고, 양국의 실질적 현안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실용주의적 한·일협력은 8·30 총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함에 따라 한층 더 원만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총선 정국에서 주일 외국 언론과의 회견을 통하여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존중하고 계승할 것’을 언급하면서, ‘총리 및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불참배’를 선언하였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서도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국립추도시설 설립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처리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실현 ▲북한에 의한 납치 및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양호한 한·일관계의 재구축 ▲한·일의 신뢰관계 강화 및 한·중·일의 강력한 신뢰협력관계 구축 등을 제시하면서 과거사 문제의 전향적 태도와 더불어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민주당 정권의 실세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오카다 가즈야 외무상, 간 나오토 국가전략국 담당상,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 등이 한국에 우호적인 지한파 또는 친한파 정치인이다.

그러므로, 하토야마 총리는 2009년 9월 23일(현지시간)에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동년 10월 9일 서울을 공식 방문하여 취임 후 ‘양자외교’ 차원의 ‘첫 정상회담’으로써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9·23 뉴욕 한·일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 신뢰의 한·일관계 ▲양자간 현안뿐 아니라 글로벌 및 아시아

지역 이슈에 관해 한·일공조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해 국제공조 및 한·일공조 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10·10 베이징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된 10·9 서울 한·일 정상회담은 하토야마 총리의 ‘신(新) 한·일관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심증이 투영된 회담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하토야마 총리는 10·9 서울 한·일 정상회담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 ‘민주당 정부는 역사를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정권임’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북한 핵 해법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나아가, 10·9 서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중소기업간 협력 등 민간 경제협력 강화 ▲제3기 한·일문화교류회의의 조속 출범 ▲‘한·일 그린 파트너십(Green Partnership) 구상’ 구체화 협의 ▲2010년 한국의 G-20 정상회의의 준비를 위한 긴밀한 협력 ▲2010 일본의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를 위한 긴밀한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및 동아시아지역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또, 12월 12일에 청와대를 예방한 민주당의 실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일관계 및 주요 국제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2010년이 ‘한·일 우호협력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에 뜻을 같이하였다.

요컨대, 일본은 ‘신(新) 동아시아 시대’의 기틀 마련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을 지향한 동아시아 외교를 전개하면서 한·일관계를 전략적으로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정호·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라. 한·러관계

한·러관계는 모스크바 정상회담(2008.9.29)에서 합의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기초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고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가 있었다. 양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등 북핵문제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였으나,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 비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경제면에서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2010년 수교 20주년 기념 준비 관련 인사들의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2009.4.5) 문제 등으로 방북한 후 바로 방한하여 유명환 외통부장관과 회담(4.24)을 갖고 북한이 참가 거부를 선언한 북핵 6자회담 재개방안, 북한의 로켓발사 대책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그는 이튿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은 쉬운 상대가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양국 외무장관은 재차 만나 양국관계 및 한반도 상황을 논의(7.23)했다. 이샤예프 러시아연방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연해주·하바롭스크주·사할린주 주지사 등 극동 지방정부 주요 인사 및 기업대표 20여명과 함께 방한(8.26~29)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공식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방러(9.6~10),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전: 한·러 동반성장과 한국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9.9)을 하였다. 이 방문은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고 한국의 중장

기 발전전략에 대한 러시아 인사들의 이해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용준 외통부 차관보는 모스크바에서 바라다브킨 러시아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과 제10차 한·러 정책협의회(9.29)를 갖고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준비, 에너지·자원 협력, 극동시베리아 개발 등 양국 간 주요 협력과제와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이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콘스탄틴 브누코프 신임 주한 러시아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12.3).

안보·군사 면에서는 북핵 6자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바라다브킨 외무 차관과 이용준 차관보가 서울에서 제9차 차관급 정책협의회(3.12)를 개최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협의하였다. 이후 북한의 장거리로켓 시험발사와 제2차 핵실험(5.25)으로 한·러 간 외교채널이 긴박하게 작동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로켓발사 직전에는 묵인 또는 용인과 ‘투명성 촉구’, 발사 직전 긴장고조 상황에서는 ‘자제 요청’, 발사 직후에는 ‘수용’,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시에는 ‘규탄’이라는 일관되지 못한 입장과 정책을 보였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직후 러시아 외무부는 이를 동북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의 준수와 6자회담으로의 복귀 등을 촉구하는 성명(5.25)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전화통화(5.27)를 하고 북한 핵실험의 대응방안을 협의하였다.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유명환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7월 23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긴장고조에 우려를 표명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의 엄격한 적용과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7.23)하였다. 이후 한·러 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경제면에서 한·러 양국은 모스크바에서 해운협정 문안을 합의하고 가서명(1.22)하였다. 세친 러시아 부총리는 방한에 앞서 사할린에서 개최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기지 준공식(2.18)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수행하였다. 러시아 최초의 사할린 LNG 액화기지 건설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 준공식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규형 주러 대사 등이 참가하였다. 세친 부총리는 에너지부 장관, 「로스네프트」 국영석유회사 사장, 국영방산회사 사장, 한·러 민간경협위원장 등을 수행하고 방한(2.18~20)하여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지식경제부 장관 및 국내 관련기업 대표들과 면담하였다. 이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서캅차카 해상유전 공동개발, 원자력 등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의 한·러 간 전략적 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였다. 러시아의 철강 거대기업 Mechel은 현대중공업에 매년 10~30만톤의 코크스탄을 2010년부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대중공업은 러시아 연해주 하롤스키 라이온 지역에 1만 ha(약 3,000만평) 규모의 농장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영농법인 하롤 제르노(Khorol Zerno)를 인수(4.14)해 여의도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대규모 해외 농장에서 옥수수과 콩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는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제5차 ‘한·러 극동 시베리아 분과위원회’(9.10)를 열어 양국 간 극동 시베리아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을 포함한 투자 프로젝트와 통상증진, 건설, 농수산업, 관광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명박 대

통령의 러시아 방문시 양국 정상은 2015년부터 30년 간 매년 750만톤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기로 합의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경원선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연결되는 육상 가스관을 건설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 때문에 이 사업은 보류되었고, 「한국가스공사」는 평양이 남한에 요청할 때까지 북한 통과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3.22~26), 러시아 문화장관과 만나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2010.5)의 기본 방향과 2011년까지 진행될 정부 간 문화교류 계획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하였다. 2007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어와 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위해 설립한 기관인 「루스키미르」와 고려대학교 간의 협약에 따라서 「고려대학교 러시아센터」가 개관(2009.4.25)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의 러시아 전문 문화센터이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러시아와 한국이 공동 개발한 과학위성 「KSLV-1」이 발사(8.25)되었으나, 연구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하였다.

2010년 한·러 양국은 수교 20주년을 맞아 각 분야 고위인사들의 상호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념행사와 관련, 메드베데프 대통령이나 푸틴 총리가 방한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은 제11차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2009년 협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등 양국 외무부간 고위급 협의채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경제면에서는 세계경제 침체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신속히 회복되고 있고 러시아 경제도 미약하나마 회복되고 있어 한·러 양국 간 교역과 한국의 대러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국 수교 20주년 기념행사는 단순한 문화예술 교류행사를 넘어 관광분야에서 ‘상호 방문의 해’ 지정, 축구와 태권도 등 체육교류, 영화 공동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여인곤·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II

북한정세 ...



1. 총론

가. 2009년 정세 평가

2009년 북한관련 중요사건은 로켓 및 핵무기 실험, 김정은으로의 후계자 가시화, 김정일 위원장의 왕성한 활동, 헌법 개정, 화폐개혁, 북·미 직접대화 시작, 대남 비방 중지 및 남북정상회담 시도, 중국 원자바오 총리 방북 등일 것이다.

북한은 2009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두만강에서의 미국 여기사 2명 및 개성의 현대아산 직원 1명을 억류하였다.

그러나 핵실험 직후인 6월부터 북한은 갑자기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고, 8월에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때문이기는 하지만 억류 미국 여기사 2명을 석방하였고,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 방북을 계기로 억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를 석방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각종 험담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던 것도 중단하였다. 비록 11월에 들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비난하였지만 지속되지는 않았다.

2008년 8월 이후 악화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2009년 들어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현지지도 회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2월 중순까지 150회 정도로서 이는 전년대비 1.8배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건강과시를 통한 지위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월부터는 김정일 3남인 김정은으로의 후계설이 지속되었고, 김정은을 상징하는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주민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 다만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후계관련 보도가 축소된 것은 김정일 건강회복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북한은 국방위원장 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해 그 권한을 확대하였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헌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장성택, 주상성, 주규창, 우동측 등 권력실세들이 국방위원회에 포진됨으로써 향후 북한 후계구도가 이를 중심으로 짜여질 것임을 예고하였다.

경제적으로는 1992년 이후 17년만에 화폐개혁이 단행되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자본가 통제라는 정치적 목적과 인플레이션 약화 및 국가재정 확충이라는 경제적 목적이 동시에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 방북을 통한 북·중관계 긴밀화,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 및 보스워스 특별대표 방북 등을 통한 북·미간 직접대화 시작 등이 특징적인 상황변화이다. 특히 6자회담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보스워스의 방북을 통해 북·미 직접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남한의 대북 ‘원칙론’과 북한의 ‘관행론’이 맞물려 큰 진전이 없었다. 다만 북한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방을 줄이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맞춘 ‘특사조문단’ 파견 이후 유성진씨 및 연안호 선원 석방, 임진강 수해 방지 당국회담 수용, 신종플루예방약인 타미플루 지원 수용 등에서 보여지듯이 북한의 대남 유화정책이 지속된 점은 긍정적이다.

나. 2010년 정세 전망

2010년에도 북한은 대내적 체제공고화 조치와 함께 대외적 유화 태도를 지속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은 후계구도 공고화를 위한 ‘김정은 후계 수업’을 내밀히 지속할 것이다. 본인이 건재할 때 후계체제를 완료하기 위해 김정은 지지 세력으로 주요 직책을 물갈이할 것으로 보이는 바, 김정은에게 국방위원회의 주요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체제에 위협이 되는 사회일탈, 특히 경제적 일탈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통제가 가해질 것이다. 자본주의 사조를 조장하는 CD나 외국영화 관람, 남한의 라디오 청취나 TV 시청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소자본가에 대한 단속도 지속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를 매개로 대미 및 대일, 대남 관계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화폐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예비’ 도입이 필수이므로 부분적인 대외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 관계 개선, 남북 고위 당국간 대화 등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안들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남한의 대북정책 또한 유화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북·미관계와 연동되어서 전개될 것이지만 무엇보다 남한의 대북정책이 주요한 변수일 것이다. 남한은 현재 북한 핵문제 및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및 당국간 회담 의제로 제시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전선 전술적 차원에서는 남한내 대북 여론

환기가 필요하고 실리주의적 차원에서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 사용할 경제적 지원이 긴급하며 대미 관계 차원에서는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전현준·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2. 대내정세

가. 정치동향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설정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2009년이 내부적으로는 신년 공동사설의 제목대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지만 성과는 그다지 없었다.

체제생존의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북한 정권이 근래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국내적으로는 정권의 정통성과 효율성, 강제성을 제고하여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통성 제고란 김정일의 위대성 선전을 통한 통치의 정당화를, 효율성 제고는 경제난 타개와 주민불만 해소를 통해 사회에 대한 정권의 침투력 증가를, 강제성 확보는 만일의 경우에도 군부 등의 지지를 발판으로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은 이러한 목표 추구에서 별다른 변화나 예외적인 현상이 보이지 않는 해였다.

2009년 북한정권은 선군사상과 당 중심의 사회통제를 바탕으로 한 체제결속을 강조하면서 중앙집권적 관리하의 경제발전을 독려했다. 특히 ‘150일 전투’(4.20~9.16)와 ‘100일 전투’(9.23~12.31) 등의 노력경쟁으로 내부자원을 동원하고 인적 역량 결집을 극대화하여 경제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하려 했다. 그 일환으로 연초부터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달성을 위한 선전선동 활동을 진행(1.1~5 로동신문, 조선중앙방송)하면서 과업달성을 촉구하는 각급 군중대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농근맹, 직총, 여맹, 청년동맹 등 4대 근로단체들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2.2~6)하여 과업달성 방안을 논의했고 4차례 열

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2.10, 4.22, 7.18, 10.27)에서도 분기별 인민 경제계획 수행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의 실행대책을 토의했다. 이 과정에서 계속되는 노력동원으로 주민의 피로와 불만이 누적되기 쉬운 점을 고려하여 노동당원의 선봉적인 역할과 당 조직들의 적극적인 사상사업을 강조(로동신문, 11.3)했다. 9년만에 ‘제4차 전국 선동원 대회’를 개최(2.26~27)한 것도 이 때문인데, 이는 당 정책에 대한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내어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정일의 건강이상과 대내외적 환경을 감안할 때 북한 국내정치 측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되는 것은 김정일의 건강여부와 국정장악 능력이다. 2009년 11월까지 김정일의 현지지도는 148회로 월평균 13.5회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8년 대비 1.7배 증가한 것이다. 군부대 방문이 위주인 현지사찰로 인해 김정일의 육체적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감당해내고 오히려 예년보다 왕성한 공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강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또한 김정일 생일(2.16), 창군일(4.25), 김정일 당 사업 개시일(6.19), 김일성 기일(7.8), 정권수립일(9.9), 창당일(10.10) 등 북한이 매년 거행해오는 중요한 정치적 기념행사도 예년수준으로 차질없이 진행된 것에서 정권유지에 이상조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중앙보고대회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 군사력 강화, 경제강국 건설, 내부결속 등 통상적인 내용이 반복해서 강조되었다. 다만 김정일의 매제이자 ‘제2인자’로 평가되는 장성택이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수행한 회수가 2009년에 급증한 것과 후계자로 지목되는 3남 김정은을 우상화하기 위한 노래 및 공연극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는 외국의 보도들이 후계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이다. 그러나 권력누수의 위험

성과 3대세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고려하여 후계자를 조기에 가시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09년에 정치적으로 가장 의미가 컸던 행사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3.8)하여 687명의 대의원을 새로 선출한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4.9)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주요 인사를 단행했으며 헌법을 수정한 것이다. 대의원 선출은 북한 인구를 약 2,400만명으로 추산할 때 인구 약 35,000명당 1명꼴로 이루어졌다. 제12기 대의원에는 약 310명의 인물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수준이다. 본격적인 세대교체보다는 체제 안정에 주력한 때문으로 보인다. 조직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국방위원회가 개편되어 위원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대부분의 주요 인사가 유임된 가운데 새로 임명된 위원은 5명으로 주로 당·정·군 통제기구의 책임자들이다. 장성택 당 행정·수도건설부장을 포함하여 주상성 인민보안상,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임명된 반면 최용수는 해임되었다. 헌법도 수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통치이념으로 명문화했고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헌법상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최고영도자’로 규정함으로써 김정일이 이미 실질적으로 행사해온 권한을 조문에 반영했고 중요 조약의 비준·폐기 및 특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국방위원회에도 중요정책 수립권, 국가기관 감독·통제권을 새로 부여하여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운영체제를 강화했다.

이에 앞서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하여 인민무력부장에 73세의 군 차수 김영춘을, 총참모장에 대장 이영호를 임명(2.11)했고, 태종수 내각

부총리를 함경남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에 임명했다. 김영춘과 이영호의 임명은 군 조직 일신과 내부 정비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태종수의 임명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함경남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였던 홍성남이 사망(3.31)한 데 따른 후속인사였다. 홍성남 외에 2009년에는 당 과학교육부장을 역임한 이광호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 조국전선 의장 여원구가 사망(각각 6.26, 7.31)했다.

정치적 불안은 사회적 결속이 깨어져 사회에 대한 정권의 침투력이 약화될 때 발생한다. 주민생활 향상과 더불어 침투력을 제고시키는 손쉬운 방법의 하나는 긴장조성이다. 북한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구사하는 이 방법은 2009년에도 되풀이되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김정일의 건강이상이 보도되는 가운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군복을 입은 채로 성명을 발표(1.17)하여 대남 전면태세 진입 등을 선언했고 북한의 제2차 핵실험(5.25)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결의하자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규탄 군중대회’를 개최(6.15~23)하였다.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응하여 대미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체제결속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외부 적에 대한 적개심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 고취를 통해 사회통합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으나 경제난 이후 주민들의 가치의식과 사회의식은 물신주의와 개인주의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외부정보의 유입도 크게 늘어나 체제안정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사정은 ‘7·1 조치’ 이래 기초 물자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등 거시경제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예비와 가능성의 동원을 통한 생산의 정상화”와 “있는 생산

토대의 효과적 이용”을 강조하지만 역부족이다. 결국 국가 수입의 증대를 통한 재정 확충 문제와 인플레이션 진정을 통한 경제 안정화라는 문제를 잡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11.30)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이다.

현재 북한정치는 아무런 변화없이 안정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반면 사회경제적 변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인내할 것을 호소하면서 개인적 이익 추구에 대해서는 ‘혁명적 의리’, ‘동지애’ 등을 강조하여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요소 중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경제난으로 인한 정책의 침투성 저하와 사회통합의 이완, 대외적으로는 핵문제의 해결이다. 권력 내부에서 김정일 정권을 위협하는 어떤 조짐도 찾을 수 없고 군부가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의 정통성과 사회에 대한 강제성의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에도 김정일 정권은 국내적으로는 경제난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대외적으로는 핵문제 해결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은 북한으로서는 광복 65주년, 노동당 창당 65주년이 되는 해이고 강성대국 진입의 해인 2012년에 한 발 다가서는 해이다. 이른바 ‘겪어지는 해’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북한으로서는 무엇보다 주민생활의 개선 등 경제적 성과가 필요한 해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경제난에 따른 체제의 정통성 실추와 주민의 사상적 이완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의 어려움은 ‘제국주의 책동’ 탓이며 김정일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일관된 노선을 견지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상교양을 예년처럼 반복할 것이다. 또한 체제유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유

지하는 데는 물리적 강제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군부의 충성 확보가 절대적이므로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체제수호의 보루로 활용하는 선군정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교덕·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경제동향

2009년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제분야에 주력하되,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전’을 경계하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더욱 철저한 확립 등을 강조하며, 경제관리 분야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계획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2009년의 경제정책은 보수적인 경향을 띠는 것을 예고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올해도 식량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 식량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조선중앙방송, 1.15).

이와 함께 북한경제의 ‘선행부문’의 정상화와 현대화 작업을 통해서 경제회생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속공업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금속공업의 선차적발전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는데 힘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금속공업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전력과 석탄부문의 사정이 다소 개선되면서 이제 금속부문이 경제회생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속부문 외에, 화학공업부문에서 남흥가스화대상공사를 언급해 북한이 기초화학생산을 위한 가스설비화를 강조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북한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최신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하여 인민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자력갱생의 차원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기초”로 삼아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모가 나게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북한경제의 실적은 2008년의 경제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경제실적 증가의 주요 요인들이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6자회담 진전에 따라 제공된 에너지 관련 물자도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았고,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과 대외교역의 감소, 그리고 기상악화로 인한 식량생산의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더하여 유엔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경제지원도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등의 대중동원 정책을 통하여 일부 선행부문에서는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북한의 산업부문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식량 생산이 비료 부족 및 옥수수 생장에 불리한 기후 조건으로 전년에 비해 10% 정도 감소하였고, 제조업 부문 역시 외부환경의 악화로 2008년과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력, 석탄, 금

속 등 전략산업과 건설업 등에서의 생산 위축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 북한의 식량생산이 전년도에 비해 약 10% 정도 감소된 380~390만톤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남한으로 부터의 비료 지원 중단에 따른 비료 사용량의 감소와 7월 중순 이후의 동북부 지방의 가뭄에 따른 옥수수 수확량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북한의 자체 식량공급량은 400만톤 이하로 추정되며, 이는 최소 소요량 520만톤에 비해 120만톤 이상 부족한 규모이다. 따라서 중국의 지원과 통상적인 상업적 수입을 감안하더라도 70만톤 이상의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남한의 대규모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까지 악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제조업부문에서는 외부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난해와 같은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150일 전투' 등 대중동원 정책을 통한 단기적인 성과 도출에 성공함으로써 전력, 석탄, 금속 등에서 부분적인 생산 증가가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두드러진 생산 위축도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경공업 부문은 방직공업 부문에서 다소의 실적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식료공업성의 창설과 각지의 종합식품가공공장의 건설 움직임도 관심을 끌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부문에서는 평양시 10만 세대 건설 및 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으로 실적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건설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조짐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건설 일정에는 어느 정도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상업·유통부문은 시장에 대한 당국

의 여러 가지 제한조치들과 민간의 상업·유통활동을 제약하는 ‘150일 전투’ 및 ‘100일 전투’ 실시로 인하여 실적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이 8월 이후 대북한 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실제규모를 파악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로 올해 8월까지 중국과의 교역이 1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5% 감소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악화된 외환조달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무성과 무역성을 중심으로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에 파견한 대외무역 관계자들의 수가 100여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유치 실적은 4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열린북한방송, 10.16)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2009년 북한당국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던 시장 폐쇄 조치를 단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시장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지난 3월 15일에는 장마당에서 팔지 말아야 할 ‘통제물품 품목’을 공시하면서 강력한 시장단속을 예고하였는데, 여기에서 공지된 ‘통제물품 목록’에는 유통별, 종류별로 물품들이 정리되어 있고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포함되고 있으며, 그나마 팔 수 있는 물건들도 가격을 정해 놓아 사실상 장사 금지령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5월에는 각 인민반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을 당의 의도대로 관리 운영할 데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서, “시장은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철저히 통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이어 “무역

회사들을 국가무역기관에 통합시키고 국가의 무역계획에 따라 유일적으로 무역을 진행할 데” 대한 국방위원회 지시문을 하달하여 시장 물품에 대한 공급자 역할을 해온 무역회사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였다.

북한의 시장에 대한 통제조치는 지난 11월 말에 전격적으로 실시한 화폐개혁에서 절정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화폐개혁의 일차적인 목표는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구매력 및 상인들의 자금동원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시장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화폐개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이 시장의 상인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물건을 팔고 북한 화폐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많은 화폐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북한 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폐개혁의 결과로, 북한당국은 국가경제에 대한 통제력 회복, 자원조달 능력의 확충, 공식경제부문의 활성화 계기 마련 등의 측면에서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구축된 시장을 통한 이익창출 구조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한 상인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로운 시장질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당국의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북한경제는 어느 때보다 험난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첫째, 화폐개혁을 통해서 기능이 축소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공식적 유통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으며, 확충된 자원조달 능력을 활용하여 공식경제부문의 생산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

인가, 둘째, 2010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식량부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병행하여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경제지원과 협력도 증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남북경협도 포함될 것이다.

먼저 2010년 북한의 경제정책은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2009년의 보수적인 기초가 견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화폐개혁 이후 개선된 상황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일차적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는 외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와 금융부분에 대한 제도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외환 통제는 일반인들의 외환 사용과 보유를 금지시키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부분에 대한 제도 개혁은 기업이나 국영상점들에게 효과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의 사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마련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다. 새로운 금융시스템에는 주민들의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예금의 자유로운 출금 보장 등의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북한의 경제실적은 북핵문제가 북·미회담 및 6자회담 등을 통하여 진전을 보이는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가 개선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증가하고 남북간의 경제관계 역시 개선됨에 따라 2008년에 보여주었던 미약한 성장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핵문제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상황의 뚜렷한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화폐개혁을 통해서 확충된 정부의 자금동원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산업부문의 성장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금속을 중심으로 한 4대 선행부문 중심의 투자, 평양시의 건설사업 지속 등으로 2010년 북한의 산업생산은 2009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다만,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대규모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면적인 산업생산의 증가보다는 일부 전략적인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산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임강택·북한연구센터 소장

다. 사회동향

2009년 북한 사회 부문의 특징은 시장활동 등에 대한 주민 통제 강화, 사상교육 강화와 체제 결속 도모, 주민생활 개선 노력, 정보통신 및 외국어 교육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강화되어 온 주민 통제는 2009년 들어 한층 강도 높게 시행되었다. 특히 주민들의 시장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통제가 두드러졌다.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와 함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탈북 및 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통제 또한 한층 강화하였다. 연초에는 국가보위부 전파탐지국에서 혜산, 신의주, 무산, 회령, 온성 등에 대규모 검열조를 파견하여 24시간 전파 탐지 활동을 수행하였고, 일부 접경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새로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였다(오늘의 북한소식, 제266호). 150일 전투 기간에는 각 근로단체별, 인민반별 주민동원과 관련하여 미등록 거주자와 조직생활 누락자, 무직자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오늘의 북한소식, 제293호).

이와 같이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와 주민들 간에 뇌물 수수와 불법행위 묵인이라는 ‘홍정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강도 높은 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시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단속원들에게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는 우발적인 저항 행위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화 진전, 자본주의 사상 유입 등에 따른 체제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주의 사상교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핵 개발과 이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전사회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위기감 조성 및 자신감 고취를 통한 체제 결속을 도모하였다. 사상교양의 주요 내용은 사회주의 사상교양, 선군혁명사상 교양, 혁명전통 계승, 외부 사상·문화 침투 방지 등이며, 김정일 위원장 외병설 이후에는 그에 대한 충심과 일심단결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이 한층 강화되었다. 최근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대미의식 변화를 우려하여 미국이 “변화와 다무적 협조외교 타령을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지만 그 본심은 이전 행정부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비난하면서(로동신문, 6.9, 8.2; 민주조선, 1.27), 주민들의 철저한 ‘사상무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부로부터 유입·확산되는 정보와 자본주의 문화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사상교육도 한층 강화하였다. 외부 사상·문화가 유입되는 상황을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위험한 독소”이고 “마약”인 제국주의 사상문화에 “길을 열어주면 노예가 된다”고 경계하였다(로동신문, 2.26). 서구 사상문화의 영향에 민감한 청소년

년층에서 남한 문화와 유행을 선호·모방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체제에 대한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청소년에 대한 사상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문 방송 매체들을 통해 “만경대 가문의 애국의 혈통”을 강조하고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로동신문, 2.10, 2.16, 6.23; 조선중앙방송, 3.23).

사상교양 강화를 통해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의 유입을 경계하는 한편, 북한의 핵 개발과 이에 따른 국제 사회의 압력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면서 주민들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광명성 2호 발사와 2차 핵 실험 전후로 북한이 과학기술 강국, 핵보유국임을 대내적으로 적극 선전하면서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였다.

사상교육과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생활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북한 당국은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먹는 문제 해결”과 생필품 수요 보장에도 주력하였다. 식량을 비롯한 소비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7월에는 식료일용공업성을 신설하고, 그동안 가동이 중단되었던 의식주 관련 소비품 생산 공장을 개보수하여 재가동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였다. 2009년 들어서 사리원곡산공장, 해주어린이식료공장, 함흥 기초식품공장, 2·8비날론연합기업소 개·보수와 평양, 평성, 신의주, 원산, 강계, 재령, 혜산 등 각 도별 종합식료기공공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한편 2012년까지 평양에 주택 10만 가구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살림집 건설과 시내 건물 개보수 및 도로 정비, 평양 보통강 준설 작업을 진행하는 등 평양시 환경 정비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조선신보, 1.29, 2.3, 4.29; 조선중앙통신, 4.3; 조선중앙TV 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식량과 비료 지원이 감소한 가운데 식량과 소비품의 부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에 의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한편, 전세계적인 식량난 상황을 강조하면서 대내불만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도는 자력갱생에 있다”고 하면서, 비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군중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농촌에 지원해야 하며, 종자혁명·이모작·감자 및 콩농사, 농산과 축산의 배합, 수산물 생산과 재배어업 및 양어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조선중앙방송, 1.15; 로동신문, 1.22).

교육 부문에서 북한 교육성은 “새 세기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 교육방법을 개선”할 것을 올해의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교육신문, 1.1), 관련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개발에 주력하였다. 2008년 하반기 소학교 교육과정에 컴퓨터 및 외국어 교과를 도입함에 따라, 금년에는 관련 교원 양성을 위한 교원연수를 활발하게 실시하였으며, 외국어 시청각설비를 자체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다. 컴퓨터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개발하여 부분적으로 활용해 왔던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원격대학을 설립하여 지방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원격교육 운영을 시작하였다(조선신보, 9.25).

2010년도에는 화폐개혁의 연장선 상에서 주민들의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임금을 이전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을 시장에서 직장으로 복귀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2010년에는 이러한 경제적

조치와 함께 정치사상교양 및 조직활동 강화를 통해 그간 직장을 이탈하여 시장으로 향했던 주민들을 다시 직장으로 불러들임으로써 계획경제 질서를 회복하고 시장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2010년도 초반에는 화폐개혁의 여파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주민들의 시장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화폐개혁으로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잠재적 불만과 박탈감이 표출될 수 있는 우발적 계기가 형성된다면 국지적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면서 식량 공급을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대외관계 개선에 수반되는 외부 정보 및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은 대내적으로 주민에 대한 통제와 사상교양을 더 한층 강화할 것이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학과 통폐합, 교육방법 개선 등 교육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는 가운데, 특히 과학기술부문의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부분적인 교류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첨단과학기술 및 외국어 교육에 대한 강조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발전전략 속에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 조정아·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라. 군사동향

2009년도 북한은 공세적으로 군사위협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체제통합과 체제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주도권 장악과 미·북 군사대화 유도를 위한 미국의 관심 끌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2009년도 북한은 선언적 군사위협과 실질적인 군사위협 조치들을 번갈아 취해 옴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수위를 고조시켰다.

북한의 선언적 군사위협은 1월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북한은 남한이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부득불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며 “그것을 짓몽개 버리기 위한 혁명적 무장력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1.17)⁷이라는 엄포를 놓았다. 특히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동 성명에서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 해상경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조선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서해해상을 ‘군사분쟁지역화’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NLL을 부정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⁸을 적용하게 될 경우 그것은 곧 서해 해상의 무력 충돌을 의미하기

7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8 북한은 1999년 6월 제 1차 연평해전이 발발한 뒤인 그해 9월 2일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NLL을 무효화를 주장한 바 있다. 그들이 내놓은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북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육·해·공군 등 정규군의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기관인 조선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군복을 입은 채 대남 ‘전면대결태세’를 선언한 것은 전쟁선포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충분했다.

이에 더하여 1월 30일 북한은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 사항들을 무효화”하며,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힘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조선중앙통신, 1.30). 2월 들어서도 북한 당국은 ‘군 총참모부 대변인’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북한군의 전면대결태세 진입상태라는 사실을 재강조함으로써 군사적 위협을 지속했다(조선중앙통신, 2.19). 북한의 언론매체들도 연일 “군사적 충돌”, “전쟁접경” 등의 군사적 위협 발언을 쏟아놓았다. 예를 들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2.3)은 “북남관계는 전쟁접경에까지 이르러 이제 더는 수습할 방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로동신문, 2.3).

2월 북한은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책임자의 통지문(2.28)’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미군의 도발과 위반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만약 미군이 북남관리구역에서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산곶과 남측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측 용도와 남측 서격렬비열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을 지나 북측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의 북쪽 해상수역을 인민군 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0년 3월 23일에는 인민군 해군사령부가 ‘중대보도’를 통해 ‘서해 5개 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남측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2개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우리 군대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치를 것”(연합뉴스, 2.28)⁹이라고 경고함으로써 서해해상의 군사적 긴장조성에 이어 육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조성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5월 북한군 관문점 대표부는 성명(5.27)을 통해 우리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가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우리선박에 대한 단속·검색을 포함해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즉시적이며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 성명이 “서해 우리의 해상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남한)해군 함선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 강조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보복 군사공격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월 들어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서해해상전투는 우리 영해를 단 0.001밀리미터라도 침범하는 원수들에게 어떤 무자비한 징벌이 가해지는가를 똑똑히 보여준 단호한 선언이었다”고 주장한 것은 서해해상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보여준 예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이후 북한은 점차적으로 긴장조성 국면에서 대화분위기로 전환해나감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분위기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다만 지난 10월 15일 북한 해군사령부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보도

⁹ 북한이 남한관리구역 내에서 미군의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11월 29일 북한은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군이 북과 남의 합의하에 설치된 북남관리구역을 출입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대결과 긴장이 격화할 수 있는 심상치 않는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에서 “남측 해군 함정들이 12일 하루 동안에만 정상적인 고기잡이를 하는 우리(북한)어선들이 저들(남한)의 수역을 침입했다고 하면서 10차에 걸쳐 16척의 전투함을 우리 측(북한) 영해에 침입시켰다”며 “남조선 군 당국의 처사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대화와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구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선언적 차원의 이 같은 군사적 위협에 더하여 실질적인 군사적 도발을 의미하는 여러 군사적 조치들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2009년 2월 중 북한이 해주와 웅진반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해안포 훈련의 횟수를 늘리는 등 일련의 군사적 움직임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강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13).¹⁰ 북한은 2월 24일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해안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이 24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해주와 웅진반도에 집중배치한 해안포로 서해를 향해 포탄을 수십 발을 쏘았으며, 이는 “통상적인 동계훈련 중 하나로 도발징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2.25). 2월과 4월 사이 북한군은 해안포 사격과 전투기 훈련 횟수를 2~6배 가량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연평도 우측 북방의 대수압도 근처에서는 1월~5월 초 사이에 약 19회에 걸쳐 1천여 발의 포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서북지역에서 북한공군의 기지전개와 공대지 공격, 야간비행훈련 횟수도 크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월~5월 초 사이 황해도 과일 비행장에서 출격한 전투

¹⁰ 당시 “북한 해안가에 엄폐된 해안포의 일부가 진지 밖으로 노출된 모습이 자주 식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들은 우리 군이 백령도에서 북쪽 64km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을 1,087회나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연합뉴스, 5.8). 이같이 북한 군이 해안포 노출 횟수를 늘리고 훈련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북한 당국이 경고해 온 북한군대의 전투대비 태세를 사실로 입증함으로써 군사적 위협강도를 높이는 전술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4월 들어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 시험(4.5)을 감행하였으며, 5월에는 2차 핵실험(5.25) 강행에 이어 지대함파 지대공 등 단거리 미사일 6발을 시험발사한 결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수위는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전 방위 군사적 도발 카드는 우리 군 당국이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C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연합뉴스, 7.18)¹¹할 정도로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극대화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북한군에 의한 7월 2일 단거리 미사일 4발 발사(신상리 기지), 7월 4일 단거리 미사일 7발 발사(깃대령 지역), 10월 12일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동해 해상) 등이 이어졌다.

또한 북한은 NLL을 침범하는 빈도를 높여 서해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오기도 하였다. 2009년 11월 10일까지, 올해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회수는 총 23회로 집계되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NLL 침범 활동은 서해해상의 남북한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었다. 지난 11월 10일 발생한 서해교전이 그것이다.

¹¹ 워치콘은 북한의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로 5단계로 구성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정찰기 등 정보수집수단과 감시횟수, 정보 분석요원이 보강된다. 한국의 연합사령부는 7월을 기점으로 워치콘 2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북한은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군사적 위협과 대화 병행을 통해 그들의 일정한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북한은 미·북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미·북대화를 위해서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6자회담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선언적 군사위협과 실질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미·북대화가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위협을 재개할 수도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NLL을 부정하는 침범행위의 빈도를 높여나감으로써 NLL 재협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할 것이다. NLL 침범 → 군사적 공격 감행으로 서해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나갈 것이다. 북한은 극단적으로 ‘전쟁불사’ 군사적 위협을 구체화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상황을 고조시켜 나감으로써 남한의 혼란 자극 → 「반전 평화주의」 및 「반미주의」 확산 → 한·미동맹관계 이완을 부추겨 남한정부와 미국을 압박하는 전술을 펼쳐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영태·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3. 주요 대외관계

가. 북·미관계

2009년 초 북한은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이 개최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군사력이 아닌 외교를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로 놓으며 미국의 포용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반기면서도 경제문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시급한 현안 때문에 북한 문제가 밀리는 것을 우려하였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통해 미·북 양자회담의 긴급성을 높이려 하였다. 북한은 3월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시험용 통신위성’의 발사 날짜와 좌표를 통보하였고 외기권 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아닌 위성 발사라고 강조한 것은 미국과의 갈등이 아니라 대화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마침내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대내외 긴장을 끌어올렸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후 미국은 일본과 함께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였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는 실패하였지만, 강력한 의장성명에 합의하였다. 동 성명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 제한을 명시한 유엔결의안 1718호 8항의 시행을 촉구하였다. 유엔안보리의장성명에 의거해 4월 24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

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등 3곳을 제재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6자회담 거부와 핵실험 등을 예고하였으며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미국의 반응은 단호하였다. 6월 12일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를 채택하여 대량살상무기 금수, 수송검색, 대량살상무기 금융제재 등 대북제재를 본격화하였다. 미국은 대북제재 TF팀을 구성하고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 대사를 임명하면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되돌릴수 없도록 해체하지 않는 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제재 전담팀의 구성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2005년~2007년 초의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반발로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 핵억제력의 강화, 경수로 발전소 건설 적극 검토, 우주 이용 권리 행사 등을 언급하였다.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압박은 강화되었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받은 ‘강남호’를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존 메케인호’가 추적하여 결국 목적지로 예상되던 미얀마에 들어가지 못하고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유엔제재와 별도로 미국 자체로 말레이시아의 북한계좌에 대한 제재 조치에 착수하였다. 또한 미국은 모니터링의 신뢰 부족을 이유로 식량제공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7월 16일 유엔안보리는 북핵과 미사일 발사 등에 깊이 관련된 북한인물 5명, 기관 5개, 물자 2개를 제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제재 모드 속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미·북 국교정상화를 포함한 인센티

브 패키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7월 17일 단순히 협상테이블에 복귀하는 것만으로 북한에 보상을 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핵폐기를 결정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커트 캠벨 미 국무성 동아태 차관보도 이즈음 서울을 방문하여 “북한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침내 북한은 한·미공조에 기초한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답하였다. 7월 24일 유엔주재 북한 대사 신선호는 북한은 미국과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는 데 반대하지 않으며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8월 4일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여 5개월간 억류되었던 두명의 여기자를 석방시킬 수 있었다. 김정일은 클린턴과의 회담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과의 협상 국면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김정일은 클린턴과의 회담에서 군부인사를 배제한 채,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배석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고 정책결정 과정이 정상적인 상태임을 과시하려고 하였다. 11월 초에는 이근 외무성 미주국장이 뉴욕을 방문하여 성김 6자회담 수석대표 등과 만나 미·북 양자회담의 필요성과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등을 조율하였다.

12월 8일부터 2박 3일간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이 이루어졌다.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최고위급 방북으로 주목을 끌었다. 방북기간 중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강석주 제1부부상과 김계관 부상 등과의 회담을 가졌으며 핵문제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 문제, 에너지 지원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북한

은 동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6자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차기 접촉의 필요성을 암시하였다. 한편, 미·북회담 직후인 12월 11일 태국정부는 유엔안보리결의안 1874에 입각하여 북한의 무기를 수송하던 그루지야 국적의 수송기를 검색하여 지대공 미사일 부품, 견착식 미사일 등을 압류하였다.

2010년에도 북한의 대미 유화 제스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특히 보즈워스 방북 이후 미·북접촉의 모멘텀을 이어가려 할 것이며 보즈워스 방북을 ‘실무접촉’으로 간주하면서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북을 성사시켜 미·북관계의 극적인 반전을 꾀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 포기의사를 확인하고 미국의 당면 관심사항인 핵실험과 확산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가로 실질적으로 핵무기 의제는 뒤로 미루고자 할 것이다.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서는 “핵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임”을 주장하며 평화협정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미·북 양자대화를 통해 미국과 민간 핵협정을 체결하고 여기서 핵무기는 제외하는 인도식 해법을 목표로 대미 접촉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진욱·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북·중관계

(1) 2009년 북·중관계

2009년은 북·중 양국관계가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인해 전반기와 후반기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반기에는 북·중관계가 화해와

협력 모드로 양국관계가 증진되었으나,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부터 후반기인 10월까지 북·중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러다가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북에서 북한이 조건부 6자회담 참여를 시사하고 중국 역시 대북협력 확대를 약속함으로써 양국관계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전 시기로 복귀하였다. 이처럼 2009년도 북·중관계는 북한의 핵개발의 욕과 6자회담 참여 문제 등으로 인해 증진, 악화, 원만한 관계를 경험하였다.

(가) 2009년 전반기

북한과 중국은 2009년이 북·중 수교 60주년으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합의하여 “북·중 우호의 해”로 지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갔다. 북한이 먼저 김영일 총리를 중국에 파견하여(3.17~3.21)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에 참석하고 중국과 무역투자, 에너지 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6자회담 적극 추진, 고위층 교류에 합의하였다. 이에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 확대에 만족을 표하고 북한의 로켓발사가 “평화적 우주 이용 목적도 있음”을 감안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를 반대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한 것은 6자회담 북한복귀를 위한 것이었다. 박의춘 북한외상 방중(4.25~4.29)시에도 중국은 북·중 양국관계 협력 강화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만을 촉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5.5)한 직후부터 북·중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중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결국은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방북하게 되었다.

(나) 2009년 하반기 :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2차 핵실험은 후진타오 중국 정부가 추진하여왔던 대북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중국은 불만의 표시로 천즈리(陳至立) 전인대 부위원장의 방북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5.29)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강력히 경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도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로서 “북한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해서는 않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중국의 경고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에 찬성함으로써 북·중관계는 최고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해 중국은 자국의 유엔차원의 대북제재 참여만으로는 북핵폐기가 실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중 양국관계가 악화일로로 가는 것이 국가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대북협력 확대를 제시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하여(9.14) 친서에서 “중국은 한반도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구를 재차 촉구하였다. 당시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하지 않아 중국의 노력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18년 만에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방북하여 북한으로부터 양자회담을 봐가면서 다자회담 복귀 약속을 받아내었다.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으로 6자회담 복귀를 받아낸 데는 중국의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약속한 데 있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북기간 중국은 북한과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등 여러 협정과 합의문, 의정서, 양해문 등에 조인하였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 경제기술, 소프트웨어 산업, 중국지원 하에 단동 북·중 압록강 대교 건설합의, 수출입 공동검사, 관광단체의 북한 방문 활성화에 합의하였

다. 아울러 북·중 군사교류도 이전보다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량광리에(梁光烈) 중국 국방장관이 방북하여(11.20) 북한과의 군사교류 확대를 제안하고 북·중 양국 군부가 체제의 수호자임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2) 2010년 북·중관계 전망

2010년은 북한이 중국의 입장인 6자회담 복귀를 수용하여 5~6월 경에 6자회담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른 북핵문제 해결을 주장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미·북 협상이 원만해지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더욱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미·북 협상을 촉구하나 이를 북한에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급진화된 미·북 협상이 중국의 6자회담 영향력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것을 우려하여 점진적인 협상타결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중 경제협력에 관해 2010년은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사회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 교역은 2009년에 비해 2010년은 3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나진-선봉항을 이용하여 두만강을 통해 일본, 러시아, 한국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북한의 철광석 수입을 위해 실질적으로 북한의 시설기반 구축을 위한 많은 투자가 예상된다. 북한의 화폐개혁으로 인해 중국 화폐의 가치가 높아진 점을 중국이 더욱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은 자국의 금융시스템으로 북한 은행의 중국내 거래제한이나 북한자금의 접근을 막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는 한 중국의 유엔차원의 대북제재 수위가 한층 낮아질 것이다.

한·미·일 3국의 대규모 대북 무상 경제지원이 적어진 가운데 중국의 대북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2009년도 73%)와 역조현상(2009년도 약 10억 달러)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북한의 대중 경제 종속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 최춘흠·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다. 북·일관계

후쿠다 정권의 대북 대화정책의 결과,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납치자 피해자의 전면적 재조사, 일본의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 등이 합의되었지만, 후쿠다 총리의 전격 사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외병 등으로 합의 내용은 실행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후, 북·일관계는 소강상태로 전락하기 시작하였고, 북한의 북핵문제와 납치문제에 역점을 둔 아소 정권이 등장하면서 냉각되어 갔다. 특히, 2009년 3월에 접어들어 북한이 위성발사체의 실험발사를 예고하면서 북·일관계는 한층 악화되었다.

오바마 행정부와 아소 정권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실험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대북 압박 공세를 강화하였고, 특히 일본은 북한의 로켓이 자국의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경우를 우려하여 대북 압박에 매우 적극적이고도 강력하게 가세하였다.

일본은 ① 발사 저지를 위한 사전 견제, ② 미·일 공조에 의한 발사 미사일 요격, ③ 발사후의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및 독자적 제재 조치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였고, 북한 미사일 발사의 감시를 위하여 감시정보시스템을 운용하며,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일

본은 북한의 로켓 낙하 우려가 있는 아키다현에 ‘위기관리부’를 설치하였다.

북한의 로켓 시험발사(4.5) 이후, 일본은 대북제재의 논의를 위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미국과 함께 기존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는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일본은 UN 안전보장이사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제2차 핵실험(5.25)과 더불어 지대공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자, 일본내에서는 북한 위협론의 증대에 따른 ‘적 기지 공격론’이 재차 부각되었고, 일본 정부는 ①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 ② 독자적 제재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즉, 아소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후,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적극 동참하면서, 대북 수출 전면금지 등 독자적인 제재 강화에 의한 압박전략을 추구하였다.

아소 정권은 대북 수출금지 품목인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될 수 있는 대형 탱크로리를 북한의 ‘조선백호7무역회사’에 불법 수출한 업자를 체포하였고,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정밀기기인 자기측정장치를 미얀마를 경유하여 북한에 수출하려 한 조총련계 무역업체 사장을 외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혐의로 체포하였다.

나아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가 2009년 7월 16일(현지시간)에 북한의 핵관련 기업 등 5개 단체 및 고위 관련자를 결정함에 따라, 아소 정권은 2009년 7월 24일부터 북한의 핵관련 기업 등 5개 단체의 자산 동결 및 북한 고위관리 5명에 대한 출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아소 정권 아래에서 북·일관계는 극도로 냉각되고 악화되었다. 그런데, 8·30 총선에 의해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북·일 관계도 미·북관계 진전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납치문제와 대북제재 등에 관해 자민당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대북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고 있고, 북한 역시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에게 유화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9월 10일 교토통신(共同通信)과의 회견에서 “일본 당국의 부당한 적대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지, 일본 국민은 적이 아니다”며 대일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였고,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대사는 9월 11일 교토통신과의 회견을 통하여 납치문제를 의제로 하는 대화를 재개할 의사를 시사하였다. 또, 북한은 미국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12월 8~10일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사를 통하여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일본과의 대화에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하토야마 총리도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적극 지지 등 국제협력을 전개하면서, 북·일관계의 개선을 지향한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10월의 베이징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중의 전략적 협력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12월 11일에는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방북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므로, 북·일관계가 아직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평양 북·중 정상회담에서 합

의된 바 같이, 북한이 미·북 양자회담 및 다자회담으로 복귀하게 될 시기 즈음, 일본과 북한간에도 수면아래의 접촉이 전개될 수 있다.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이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의 대비 ▲납치문제의 국내 정치화 등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지만, 북·일 관계도 미·북관계의 진전, 남북관계의 진전 등의 영향에 따라 수면아래에서 접촉과 교섭을 전개할 수 있다.

- 배정호·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라. 북·러관계

북·러 양국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유지하였다. 비핵화를 한반도 정책기조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신랄히 비난하고 유엔안보리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해서는 비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양국 간 경제관계는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러시아 경제의 침체, 핵실험과 로켓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회 생일(2.16)을 맞아 축전(2.12)을 보내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 관계의 강화·발전을 희망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하는 전문(4.10)도 보내고 양국 관계가 “2000년 2월 9일에 체결된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공고한 기초 위에서 계속 발전함으로써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광복 64돌을 맞아 축전을 교환(8.15)했다. 『로동신문』과 『민

주조선』 등 북한 언론매체들은 양국 간 「경제문화협조협정」 체결 60주년(3.17)을 맞아 논평을 게재하고 이 협정이 “두 나라 친선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역사적 계기로 됐다”고 주장하였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4.23~24)하여 박의춘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계발전과 상호 관심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방북한 미로노프 러시아연방 상원의장, 보로다브킨 아태담당 외무차관, 풀리코프스키 의장 고문 등과 회담(11.24)을 갖고 양측 의회 간 친선협조 관계 강화·발전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로노프 상원의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고 김영일 북한 내각 총리와도 만났다.

안보·군사면에서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4.5)를 전후해 모순된 입장과 정책을 보여주었다. 서울을 방문 중이던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 위반여부를 로켓발사 이후에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함(3.12)으로써 북한의 로켓발사 자체를 묵인 또는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로켓발사 직전에는 ‘투명성 촉구’, 발사 직전 긴장고조 상황에서는 ‘자제 요청’, 발사 직후에는 ‘수용’,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4.14)시에는 ‘규탄’이라는 일관되지 못한 입장과 정책을 보였다. 또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방북(4.23~24)시 “위성발사가 모든 나라의 자주적 권리”라는데 대해 인정하고 러시아가 북한 위성을 대신 발

사해 주는 방안도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접견(4.25)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이 로켓발사를 하지 않도록 설득작업을 벌였다”고 평양에서와는 모순된 발언을 하였다. 러시아 정부의 이와 같이 일관되지 못한 입장은 첫째, 동북아와 동유럽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을 수가 있다. 둘째, 러시아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예정된 우리의 인공위성 발사를 협력하는 상황에서 인공위성을 위한 로켓발사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던 날 북한이 6자회담 거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러시아 외무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4.14)을 발표하였다. 또한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4.23~24)하여 박의춘 외무상과 회담을 할 때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했으나 북한 측은 거부하였다.

북한의 2차 핵실험(5.25)과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핵실험은 동북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였다”고 규정하면서 “러시아는 이번 핵실험을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또한 “이번 핵실험으로 역내 긴장이 고조됐으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며 유감을 표시하면서 북핵 6자회담만이 유일한 위기 해결책이라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재차 촉구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회의를 무기한 연기(5.26)하였고, 러시아 외무부는 김영재 주러 북한 대사를 불러 핵실험 실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5.27)하였다.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은 대북제재 결

의 1874호를 채택(6.12)해 북한의 핵실험을 한 목소리로 비난하였다. 미로노프 러시아연방 상원의장은 방북(11.24~25)시 최대북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을 면담하고 “북한 핵문제는 협상과 다자회담의 틀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과 “러시아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가입국이자 발의국으로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로노프 상원의장이 방북 기간 중 “북한이 과연 6자회담 복귀 의지가 있는 지 알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11.28).

경제면에서는 평양시 중구역 동흥동에 최초의 현대식 러시아상품 전문상점이 3월 초 개점하였다. 북한의 『금영합작회사』가 운영하는 이상점은 러시아의 고려인들이 투자한 것으로 러시아제 남녀 계절옷과 가방, 신발, 화장품을 비롯한 경공업 제품, 보드카를 비롯한 식료품을 판매한다. 러시아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종류와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식량지원을 하였다. 나진항에 최초로 도착(9.25)한 식량지원은 약 2개월 만에 완료되었다(11.17). 이외에 방북 중이던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수히닌 주북한 러시아대사 및 문재철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대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2010년도 문화 및 과학교류계획서’가 조인되었다(4.23). 또한 김용진 교육상과 궁석웅 외무성 부상 및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수히닌 주북한 러시아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어센터』 개관식(4.24)이 평양외국어대학에서 열렸다. 이 센터는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의 전파를 위해 푸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창설된 『루스키이 미르』의 지원 하에 창설되었다.

2010년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의 급작스런 변화보다는 남북한 간 평

화공존을 선호하기 때문에 김정일 사망시 김정은 후계정권을 신속히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유지하면서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고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무력제재나 개별적 제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할 전망이다. 미·북대화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는 경우, 러시아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주장하고 대북 경수로 제공 등 6자회담에서 일정한 역할을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4자회담 등 러시아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핵문제 논의에는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북한의 만성적 경제난으로 북·러 경제관계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나, 러시아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성은 적으나 북핵문제 해결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러시아는 **TSR-TKR** 연결 등 남·북·러 3각 경협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TSR-TKR** 연결 등은 현재 러시아의 실권자인 푸틴 총리의 주요 관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 여인곤·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4. 대남동향

2009년 북한은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한해를 시작하였다. 1월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대남 군사적 대응을 선언하면서 “전면적 대결태세 진입”,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발표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은 남북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전쟁접경으로까지 왔다”면서, 남북 사이의 모든 합의 사항들을 무효화하며 남북기본합의서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조항을 폐기한다고 하여 이른바 NLL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북한의 협박에 남한정부가 차분히 대응하자 북한은 경고 수위를 한층 높였다. 『로동신문』은 조평통 성명을 거론하면서 북측 경고에 대한 남한정부의 외면이 현재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감안할 때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2월 28일 보다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MDL)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경고하였으며 3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남북관계 정상화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북한은 3월 5일 동해 영공과 주변을 이동하는 한국 국적 민간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하였다. 3월 9일에는 키 리졸브 훈련을 이유로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통행 차단과 허용을 반복하였다.

북한은 4월 5일 장거리 로켓발사를 단행하고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6월 13일에는 유엔 안보리결의 1874에 대한 반발로 북한은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하고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농축에 착수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6자회담의 “어떤 합

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8월 들어 북한의 대남 강경태도는 극적으로 전환되었다. 미국 여기자들의 석방에 이어 8월 13일 현대아산 개성공단 직원인 유성진씨 석방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남 유화 제스처를 시작하였다. 김정일-현정은 회담 후 북한은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간 육로 통행 원상 회복, 개성관광 재개, 백두산관광 시작, 추석 금강간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에 합의하였다.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었다. 남북교역 흑자의 급감, 한국정부의 인도적 지원 중단, 북·중교역 적자확대, 김정일의 건강악화, 악화되는 사회통제, 교착상태의 미·북관계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북한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 조문사절로 방한한 김기남과 김양건은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8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 조문사절단은 일정을 하루 연기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등 남북관계에 적극성을 보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후 정상회담은 핵문제의 의제 포함여부와 회담장소 등에 대한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북한은 핵문제만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난 일년반 동안 ‘비핵·개방·3000’은 “같은 민족을 모독하는 것”이며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은 꿈도 꾸지 말라던 북한의 주장이 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적극적인 유화 제스처가 남북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무엇보다 핵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대북 제안의 질에 있어서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9월 21일 방미 중 제시한 ‘그랜드 바겐’은 북한의 비확산이나 3차 핵실험 포기 등은 북핵문제의 돌파구나 대북지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북한의 명시적인 ‘핵무기’ 포기 의사가 전제되어야만 북한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성의 표시’를 요구하였으나 식량 지원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의 유화적 태도는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를 벗어나고 미·북 대화의 장애물을 제거하며, 남한으로부터 시급한 식량지원을 얻기 위한 것 등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북한은 유화적 태도를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실리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의 태도 변화는 햇볕정책에 입각한 남북관계의 구 ‘버전’에 매달리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버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에도 북한의 대남 유화 제스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이후 북한은 매우 조급하게 미·북관계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자 결정하였으며 어느 쪽을 먼저하고 어느 쪽을 나중에 한다기보다는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일관계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북한이 급박하게 긴장국면을 탈피하려는 것은 김정일의 건강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건강악화는 북한이 당면한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조속히 대외관계를 안정시키고 내부적으로 후계구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대남 및 대외관계에서 실무회담보다는 정상회담 등 고위급회담을 통해 극적인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0년에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보유국가임을 자임하는 상황에서 실리차원에서 유연한 정책을 펴는 것이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김정일의 현정은 회장 면담시 합의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백두산관광 사업 재개 등은 북한의 정책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개방·3000’ 비방은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남북관계를 가로 막는 ‘장애물’이 아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 문제 역시 남북대화의 절대적 조건이라기보다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북한은 6·15와 10·4 이행 등 소위 기존의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을 포기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좌절시키고 햇볕정책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핵문제는 대미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남북문제에서 다루기를 거부하지만, 핵을 제외한 다른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 최진욱·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Ⅲ

남북한관계 ●●●



1. 총론

가. 남북회담

(1)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장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북한 특사조의방문단은 2009년 8월 23일 청와대를 예방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은 핵문제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 핵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어야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해 북한이 호응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난, 후계구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을 재촉해야 할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만 몰고 갈 수는 없는 것이 북한이 처한 현 상황이다. 미·북,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새판짜기는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2010년도 상반기 이후에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 시기는 북한 핵문제의 진전, 2010년 6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및 G-20 회의 등의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장소는 서울이 아니더라도 판문점이나 개성 또는 도라산 등의 지역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 장관급회담 및 실무회담

2009년에는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핑계로 한 개성공단 입

출입 제한조치,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계약의 일방적 무효화 통보, 북측 근로자 임금 300달러 및 토지사용료 5억 달러 요구 등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이 있었다. 2010년도에는 2009년에 개최되었던 실무회담에 이은 후속 실무회담이 전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및 개성관광 재개와 백두산관광 등 분야별 실무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남측은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강제역류 사건으로 촉발된 우리측 국민의 신변 안전보장 제고문제를 금강산관광 및 개성관광 재개와 연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 실무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관급회담과 같은 고위급회담 개최가 필요하다.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될 경우, 남북한 대표의 격을 맞추고 회담의 격식을 유지하는 문제부터 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와 함께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의 이행문제, 남북경협, 인도주의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3) 경제분야회담

2010년도 남북경제회담 재개 여부는 북한 핵문제 상황의 진전과 연계되어 있다. 일단 2010년도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세는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9년 8월 이후 한국, 미국 등에 대해 적극적인 유화조치로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1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조치를 제안할 것이다. 2010년에 핵 문제에 대해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 타협에 이를 수 있다면, 남북경

제회담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핵 문제에 대한 획기적 진전은 어렵기 때문에, 남북경제회담은 인도지원 사업과의 연계, 기존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성관광 및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차원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에서의 양보에 따라 분위기가 조성되고, 북한당국이 해외투자 유치에 매우 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 북한 본토 지역에 대한 남북경협 활성화도 기대할 만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사업이 보다 안전한 가운데 전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당국과 활발하게 접촉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4) 군사분야회담

2009년 북한이 대남군사관계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형적인 돌파전략(Break-Through Strategy)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 강압정책에 대항하여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협상과 국면타개를 모색하는 정책이다. 달리 말하면 ‘치고 빠지기’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10년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다루기 위한 남북장성급회담과 실무대표회담 같은 본격적 군사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이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군사문제 해결은 남북군사회담이 아니라 미·북 군사회담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북관계 개선이 급진전되고, 남북관계 개선이 뒤따르게 될 경우, 남북군사회담도 재개될 것이다.

북한은 1999년과 2002년의 제1, 2차 서해교전에 이어 7년 만에 발생한 3차 서해교전(대청해전)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부인하고 자신들

이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이어 12월 21일에는 서해상 군사분계선 북측 수역을 ‘평시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하였다. 2010년도에는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서해에서 군사적 긴장분위기를 조성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금강산관광 및 개성관광 재개를 원하고 있고 쌀과 비료 등을 지원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10년 상반기에는 6자회담이 재개되어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군사당국도 이에 발맞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군사적 신뢰조성을 위한 협의를 제안할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관계의 답보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북한의 체제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 서해상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 이규창·통일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나. 2010년도 인도주의 사안 전망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남한 및 국제사회의 노력은 2010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한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축조심의회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11.27)하였으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외교통상부에 국제사회와 북한인권문제를 협의할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게 되고,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집권 초반기 이명박 대통령이 향후 대북정책은 북한정부는 물론이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북정책을 표방하였던 만큼, 북한인권법의 제정으로 인해 핵문제와 더불어 북한인권문제도 대북정책의 주요 사안으로 제기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북한 인권문제를 대북관계 진전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미국도 로버트 킹이 북한인권특사에 임명된 것을 계기로 대북한 인권외교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 출범이후 미국은 ‘적극적인 인권정책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시사하였고, 이는 곧 2010년도에도 북한의 인권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인권개선과 더불어 남북한관계에서 중요한 인도주의적 사안은 이산가족문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대북지원, 그리고 북한이 탈주민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남한정부는 2010년도에도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추진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남북관계에서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추진은 2009년도 통일부의 4대과제 중 세부과제로 제시된 이래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꾸준히 시도되어 왔으며, 9월과 10월에 걸쳐 두 번의 상봉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남한정부의 노력은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이라는 목표아래 2010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의 대남 및 대미정책에서의 전술적 선택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산가족 문제의 진전 여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미·북관계의 상황, 그리고 북한 내부의 대남정책 요인 등의

변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지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북측이 남측에게 물질적 대가를 바라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을 보면, 이산가족 문제의 진전여부는 남한정부의 대북지원에 어느 정도는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경우,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서독이 했던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남한정부도 국군포로 문제를 대북지원과 연결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이산가족 상봉이 남한의 대북지원과 많은 연관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남한의 대북지원이 이산가족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2009년도 남한의 대북지원은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고, 2010년에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 채택 등의 대북제재는 인도적 지원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특별한 북한의 변화 없이는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정량 이상의 대규모 지원은 핵문제의 진전여부, 그리고 북한의 전향적이고 상호적인 태도가 고려되어 결정될 것이다. 반면에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던 것처럼, 최소한의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하지만 순수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도 분배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강화될 것이다. 분배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북한인권 보편적 정례검토에서도 제기되었던 까닭에 2010년에 북한에 제공되는 인도적 지원은 분배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다.

결국 이산가족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는 남북한 간의 정치적 변수 내지는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변수들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에 돌파구가 열리느냐의 여부는 현재 상황에서 단언하기 힘들다. 만일 핵문제의 진전과 같은 커다란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의 대북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군포로 문제도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큰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으로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주의적 사안의 주요 문제는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들 수 있다. 2010년도에도 가족 및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로 입국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에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국 등 제3국 체류기간이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정착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출산 자녀를 동반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입국도 꾸준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북·중 국경경비가 강화됨과 동시에 북한당국의 통제력이 강화된다면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의 규모는 불투명해 질 수가 있다. 여하튼 이탈주민의 증가에 대비하여 2010년에는 30개의 하나센터가 여러 지역에 개설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 홍우택·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 남북대화

가. 남북정상회담 및 장관급회담

현 정부는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말과 생각이 바로 모든 북한정책의 방향과 지침이 되는 현실에서 어떠한 남북대화도 정상회담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일독재란 북한의 정치양태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각급 차원에서 열리는 남북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정책방향과 내용이 그대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된다고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지난 시기에 남북한 정상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개최되고 도출되었던 합의사항들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7·4 남북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15 및 10·4 남북공동선언 등이 주요한 예이다. 다만 이들이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실천을 위해 상호 간에 조정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그 가운데 서로가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사항들로 공감·합의되는 부분들을 먼저 실천하고, 나머지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대화를 지속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예전의 정상회담에서는 명확하게 다루어지지 못했으나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형성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새로운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핵문제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 남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등이다. 이들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전제될 때에만 경제, 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남북한 교류협력의 내용과 폭이 풍부하게 전개될 뿐만 아니라, 지속성도 담보되어 남북이 상생공영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정상회담이 서울 혹은 다른 남한지역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도 현 정부는 탄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명박 대통령, 11.27). 정상회담이 가지는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이 현 정부에 보인 최초의 공식적 반응이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국장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북한의 특사 조의방문단이 8월 23일 청와대를 예방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천명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제안(9.21)을 남북간 차원에서만 고려할 때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의 실질적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0월 중순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남북간 비공식 접촉에서도 향후 정상회담의 내용과 관련된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색된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해서는 물론, 남북이 상생공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성숙된 단계로의 진입을 위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조치에서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 단계에 이르는 모든 사안들을 한꺼번에 협상의 의제로 상정하고, 그 개별 단계 및 조치에 상응하여 나머지 5개국도 분담해야 할 역할들을 동시에 함께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그랜드 바겐’에 북한이 호응하느냐

의 여부, 북핵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서 참가국들 사이에 진정성을 도출 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경제난, 후계구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을 재촉해야 할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만 몰고 갈 수는 없는 것이 북한이 처한 현 상황이다. 체제를 추스르고 짧은 시간 내에 난국을 탈출해야 할 북한이 그들의 희망 사항들을 가장 유리하게 민족적 차원에서 감당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남한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올 것이다. 북·미, 북·일 간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새판짜기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미 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이 전개될 2010년도 상반기를 지나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남북간 새로운 정상회담의 개최도 가능할 것이다. 개최 장소도 개성 혹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판문점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금년도에 실무회담 수준에서 머문 남북대화도 장관급회담 혹은 특사 교환의 형식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시적인 대화창구의 마련도 노력될 것이다.

- 손기웅·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남북대화

2010년 남북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핵문제의 진전 상황, 북한의 내부요인, 남한의 고려사항이다.

첫째, 핵문제의 전개양상 및 미·북대화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북대화과 함께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남북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미·북대화 및 6자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핵문제 타결과 미·북관계 개선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북대화 개최와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제공 등 미·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6자회담 재개 등의 상황은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대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북한이 중국 및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만성적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 더욱이 화폐개혁으로 인해 식량시장이 혼란을 겪을 경우 북한은 식량공급량의 확보가 절실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도 남북대화를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다.

셋째,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핵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남북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2010년 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나아가 G-20 회의를 계기로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방안과 G-20 회의의 의제에 북한문제를 상정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핵문제의 전개상황, 북한요인, 한국요인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남북대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대화의 개최 형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분야별 실무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 2009년 개성실무회담, 적십자회담,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등 분야별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한 현안을 실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2009년에 개최되었던 실무회담을 재개하는 것과 함께 금강산 관광회담, 개성관광 및 백두산관광회담 등 분야별로 실무회담이 개최

될 수 있다. 이러한 실무회담은 남북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고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는 경우이다. 분야별 실무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관급회담과 같은 고위급회담에서의 결단이 필요하다.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여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될 경우, 남북한 대표의 격을 맞추고 회담의 격식을 유지하는 문제부터 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와 함께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의 이행문제, 남북경협, 인도주의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남북정상회담이다. 남북정상회담은 핵문제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 핵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어야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시기는 2010년 6월 한국의 지자체 선거, 11월 G-20 회의 등의 일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장소에 대해서는 서울이 아니더라도 평양이나 북한의 다른 지역을 고려하는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는 핵문제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에 의한 핵문제 논의와 남북회담에 의한 핵문제 논의가 병행되는 형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남북경협을 구체화하고 인도주의 문제 등에서 새로운 타협을 이루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의 과제가 될 것이다.

- 박종철·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다. 경제분야회담

2009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기존 사업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남북경제회담이 전개되었다. 2008년 말부터 경색 조치가 나타났다. 북한은 2008년 12월 1일 개성공단에 대한 출입 및 체류 조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연말에 개성기업에 임금 체불시 제재규정과 근로조건 등을 담은 ‘노동세칙’을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통보했다.

2009년 3월에 들어서면서 남북한 경색국면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간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육로통행을 차단했다. 3월 20일 한국정부는 ‘비닐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3월 30일에는 북한이 현대아산 직원을 체제비판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2009년 4월 16일 북한은 당국간 접촉을 제의했다. 개성공단 사업 관련 중대조치를 전달할 것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4월 21일 남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4월 접촉 이후 5월에 수차례에 신경전이 있었지만, 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상황은 6월 초에 가시야 바뀌었다.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1차 실무회담이 6월 11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남한측은 억류근로자 문제를 언급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개성공업지구의 기존 법규와 계약을 재검토·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토지임대료 5억 달러(1단계 100만평), 둘째, 토지사용료 2010년부터 평당 5~10달러, 셋째, 근로자 임금 월 300달러 및 매년 10~20% 인상, 넷째, 자동차세, 기업소득세, 영업세 등의 재검토

를 요구했다. 또한 그밖에도 근로자 숙소건설, 탁아소 건설, 출퇴근 도로 건설, 노동환경개선 및 용수시설 관리운영대책 등을 제기했다. 이에 남한측은 기존의 남북간 협의사항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개성공단 법규 및 기존계약 재검토 문제는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12월 1일 북한측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조치로 인한 개성공단에 대한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 해결 및 관련제도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6월 19일 2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남한측은 억류근로자 문제 해결을 기초로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한 현안을 우선적으로 협의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 표명 후 토지임대료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이 자리에서 남한측은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남북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할 것, 둘째,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원칙에 따라 발전을 추구할 것, 셋째,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과 의지를 지향할 것 등이다. 또한 억류근로자 문제에 있어서 남한측은 조속한 석방, 그리고 가족의 안부서신과 북한 당국에 접견 허용을 요구하는 서신을 전달했다. 북한측은 이에 억류근로자 문제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조사처리 할 것을 표명하였다. 한편 억류근로자 가족들이 보낸 서신접수를 거부하였다.

개성공단 현안문제에서 남한측은 12·1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 해결,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구성·가동 등을

제의했지만, 북한측은 토지임대료 및 사용료, 임금, 세금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우선적으로 토지임대료 문제로부터 협의하자고 계속 주장하였다. 다만 북한측은 기업경영 애로해소 차원에서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를 그 이전과 같이 풀어줄 용의가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 또한 탁아소, 근로자 숙소, 출퇴근을 위한 연결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무자들 간의 실무협의 방식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밖에 남한측은 7월 중에 중국, 베트남 등 외국공단을 남과 북이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안했다.

7월 2일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3차 실무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이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이 종료되었다. 남한측은 ‘개성공단 발전 3대 원칙’을 재강조하고, 3대 원칙하에 개성공단 관련 현안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출입체류제한 조치 철회, 3통 문제 개선,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제를 협의·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다음 외국공단 합동시찰을 7월 20일부터 진행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의했다. 셋째, 인도적 견지에서 탁아소 건설 문제를 즉각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그리고 다른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밖에도 남한측은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 4·21 남북접촉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북한측은 토지임대료 5억 달러 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남한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억류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남한측은 억류근로자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즉시 알려줄 것과 동시에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지만, 북한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입장차이로 인해서

오후회담은 속개되지 못한 채 종료되고 말았다.

다른 한편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8월 10일 방북하여, 8월 17일 현대-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일련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 협의 과정에서 13일 억류근로자가 석방되어 귀환하기도 했다. 그 협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강산관광 재개 및 확대(비로봉 관광 시작)와 그에 따른 편의와 안정의 보장, 둘째,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한측지역 체류를 원상대로 복귀, 셋째, 개성관광의 재개 및 개성공업지구사업 활성화, 넷째, 현대의 백두산관광 준비사업 추진과 관광시작, 다섯째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측은 현대 아산측과 태평양위원회 측과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후 남북간 경제현안에 진전이 있었다. 8월 20일 북한이 ‘12·1 조치’ 해제를 통보했고, 9월 1일 경의선 육로통행이 정상화되었다. 나아가 북한은 북한근로자들의 임금을 예년 수준인 5% 인상 하는 수준에서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18일 현정은 회장에게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 표명을 했다. 리 부위원장은 ‘신변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 논의도 수용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재개 문제는 남북한 당국간 회담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은 11월 26일 합의되었다. 시찰단은 12월 12일부터 약 10일간 중국과 베트남 등 공단을 둘러보았다.

2010년도 남북경제회담이 재개될 것인지는 핵문제 상황의 진전과 연계되어 있다. 북한은 8월 이후 해외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2010년도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세는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8월 이후 한국, 미국 등에 대해 적극적인 유화조치로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1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한편, 남북 경제 및 교류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조치를 제안할 것이다. 여기에 가시적 성과가 있으려면, 최소한 남북한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이 회담에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일반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2010년 핵 문제에 대해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 타협에 이를 수 있다면, 남북경제회담은 활성화될 수 있다. 다만 핵 문제에 획기적 진전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인도지원 사업과의 연계, 기존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성관광 및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차원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도에는 개성공단에 관한 여러 실무적 협력이 남북한 당국 사이에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또한 북한당국의 공식 제안에 따라 개성관광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기 위하여 여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의 핵 문제에서의 양보에 따라 분위기가 조성되고, 북한당국이 해외투자 유치에 매우 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 북한 본토 지역에 대한 남북경협 활성화도 기대할만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사업이 보다 안전한 가운데 전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당국과 활발하게 접촉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 박형중·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라. 군사분야회담

2009년 남북군사회담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남북군사회담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회담으로서 남북군사실무회담과 실무접촉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다루기 위한 남북장성급회담과 실무대표회담이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들 상위 회담으로서 국방장관회담이 있다. 남북군사회담은 6·15 공동선언 이후 지금까지 총 30여 회 이상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되면서, 군사회담 또한 중단되었다.

2009년에도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군의 선도적 역할 확립과 강력한 국방력 유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상반기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4.5)와 ‘제2차 핵실험’(5.25)을 실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고조 조치를 감행하였다. 게다가 동계 및 하계 훈련 등 연례적인 군사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에는 대청해전(11.10)을 도발했으나, 남한의 강력한 대응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퇴각하였다.

연초에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이하 총참모부) 대변인성명」(1.17)을 통해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발표했다. 북한은 남한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성명」(1.30)을 통해 남북간 “정

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 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성명」(3.5)을 통해 남한과 미국의 합동 군사연습인 <독수리><키 리졸브> 훈련을 비난하면서, “군사연습기간 북한 영공과 그 주변 특히 북한의 동해상 영공주변을 통과하는 남한 민용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했다. 그리고 북한은 「총참모부 대변인성명」(3.9)을 통해 <키 리졸브> 훈련을 맹비난하면서 군 통신을 단절하고,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행위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장거리 로켓발사를 시사하였다. 이에 남한정부는 국민의 출입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남북 합의사항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밝히고,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북한은 3차례에 걸쳐 통행 차단과 재개를 반복함으로써 경의선·동해선 출입경에 차질을 초래했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기간(3.9~20) 중단되었던 군 통신선을 훈련종료 이후인 21일부터 정상화했다.

북한은 「총참모부 중대보도」(4.5)를 통해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 요격에 나서는 자들에게 단호한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위협하고,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 2호>와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4.13)을 채택해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며, 추가발사 중지를 요구하고, 6자회담 조기 재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다. 이에 북한은 안보리 의장성명 규탄, 우주이용권리 계속 행사, 6자회담 거부 및 합의 파기, 핵시설 원상복구 및 재처리 실시 등을 천명하는 「외무성 성명」(4.14)을 발표했다. 그리고 「총참모부 대변인 대답」(4.18)을 통해 남한

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은 “선전포고”라고 거듭 경고하고,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km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외무성대변인 성명」(4.29)을 통해 제2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 강행의지를 피력하면서 우라늄 농축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감행했고,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진행했음을 보도했다. 이에 남한은 대통령 주재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정부 성명’(5.25)을 발표하고, 외통부 대변인을 통해 PSI 정식참여를 공식발표(5.26)했다. 북한은 「판문점대표부 성명」(5.27)을 통해 남한의 PSI 전면 참여가 한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은 것으로 비난하고,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미군, 남한해군 함선 및 일반 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 북한은 「외무성대변인 성명」(6.13)을 통해 핵포기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그리고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할 것이며, 우라늄농축에 착수하고, 대북 봉쇄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같은 날 북한은 「조평통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정부의 최신 군사장비 증강을 비난하고,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후 7월 2일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했고, 7월 4일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

‘800연안호’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하였다가 북한 경비정

에 의해 나포(7.30)되었다. 이에 남북은 군사실무 책임자 라인을 통해 공식 소통을 시작하고, 남한정부는 “항로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히 선박과 선원을 송환해 주기 바란다”고 전통문(7.31)을 보내는 등, 4차례 촉구했다. 북한은 「최고사령부 보도」(8.17)를 통해 한·미 ‘을지 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8.17~27)기간에 대응해 ‘전군 특별경계태세령’을 명령했음을 밝혔다.

반면에 이 기간을 전후해서 한반도의 긴장된 정세가 완화되는 조짐도 나타났다.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방북(8.4~5)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및 억류된 2명의 미국 여기자 석방, 현정은 현대회장의 방북(8.10~17)과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 억류된 개성공단 근로자의 석방(8.13) 그리고 연안호 선원의 석방(8.29) 등이 그것이다. 북한은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명의 전통문」(8.20)을 통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해온 경의선 육로통행 및 체류관련 제한조치(12·1조치)를 8월 21일부로 해제하고, 경의선 철도운행을 재개하고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도 재가동기로 할 것임을 통보해 왔다. 그리고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에 특사조의방문단(8.21)을 파견했다. 이들은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면담하고, 청와대를 예방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한 후 평양으로 귀환했다.

9월 들어와 북한은 연평도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100~300여척씩 선단을 이뤄 조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수차례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에 남한 해군 고속정이 경고방송을 통해 퇴치했다. 제1, 2차 서해교전(1차: 1999.6.15, 2차: 2002.6.29)에 이어 11월 10일 대청해전이 7년 만에 발생했다. 북한경비정이 서해 대청도 동쪽 11.3km지점의 NLL을 2.2km 가량 침범해 남한 해군이 수차례 경

고통신을 보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이 이를 무시하자, 남한 해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가했고, 그 결과 북한 경비정은 2분 만에 반파된 채 퇴각했다. 북한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단장(김영철 중장)명의 통지문(11.13)을 남측단장(류제승 소장)에게 보냈다. 북한은 “(남측이) 경고사격이 아닌 조준사격과 파괴사격으로 선(先) 불질을 한 것은 노골적인 군사도발행위”라고 주장하고, “서해에는 오직 북이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 있다”고 강조하며 “지키기 위한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은 ‘북남관계 개선은 민족문제 해결의 급선무’라는 제목의 로동신문 논설(11.17)을 통해 “서로 적대시하고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속에서는 북남 사이에 전쟁밖에 일어날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대청해전 7일 만에 태도를 변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9년 북한이 대남군사관계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형적인 돌파전략(Break-Through Strategy)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 강압정책에 대항하여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협상과 국면타개를 모색하는 정책이다. 달리 말하면 ‘치고 빠지기’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10년에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다루기 위한 남북장성급회담과 실무대표회담 같은 본격적 군사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이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군사문제 해결은 남북군사회담이 아니라 미·북 군사회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북관계 개선이 급진전되고, 남북관계 개선이 뒤따르게 될 경우, 남북군사회담도 재개될 것이다. 그

러나 이 회담의 성격은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회담으로서 군사실무회담과 실무접촉이 될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금강산관광사업 재개와 개성공단사업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허문영·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3. 남북교류협력

가. 경제분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와 비난은 계속되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취해 온 우리측 인원에 대한 통행·체류 제한 관련 조치를 8월까지 계속하였다.

이런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속에서 우리측은 북측과 개성공단에서의 접촉(4.21)을 통해 억류근로자를 조속히 인도할 것과 ‘12·1’제한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의 기존 법규와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5.15)하는 등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 이후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3차례(6.11, 6.19, 7.2) 개최하였지만 개성공단 현안문제에 대한 진전은 이룰 수 없었다.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의 방북(8.10~17)과 현대-아·태간 공동보도문 채택을 계기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중심축인 개성공단사업은 ‘12·1’조치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북한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우리측 인원에 대한 출입 및 체류 제한조치를 8월 21일부터 원상태로 회복한다고 통지(8.20)하였다.

남북경제관계는 북한의 ‘12·1’조치 해제와 억류 근로자 문제의 해결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북측의 황강댐 방류에 따라 임진강에서는 인명피해 사고(9.6)가 있었고, 서해에서는 또 다시 교전상황이 발생하였다. 임진강 사고와 관련하여 북측은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10.14)에서 유가족에 대해 조의를 표명했고, 향후 방류 시 우리측에 통보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속에서도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그렇지만 2009년 1월~10월 중 남북한 거래 총액은 12억 7,547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15억 5,520만 달러 대비 18% 감소하였다. 이 중 반입은 7억 4,3618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7억 8,228만 달러보다 4.9% 감소하였으나, 반출은 5억 3,187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7억 7,291만 달러 대비 31.2% 감소하였다. 반출이 대폭 감소한 것은 개성공단사업 관련 물자와 장비의 반출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2009년 1월~10월 남북한 거래는 상업적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상업적거래는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상업적 거래에서 반입의 경우 개성공단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위탁가공교역, 일반교역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출의 경우에도 개성공단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위탁가공교역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반출에 있어서 일반교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남북한 거래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대북지원과 같은 비상업적 거래가 감소하고, 개성공단사업을 위한 물자와 장비의 반출 및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반입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남북한 실질교역 수지(남북교역 수지)는 2009년 1월~10월 기간 2억 7,295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 기간 남북한 거래총액에서 개성공단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1%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6%보다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남북한 거래의 감소에도 불

구하고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서 개성공단의 위상은 오히려 높아졌다.

정부는 2009년(1월~10월)에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6건(이중 민간 경협 1건, 개성공단 5건)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실적은 2007년 169건, 2008년 62건에 비추어 볼 때 경제협력사업 승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성공단에는 2009년 10월 말 현재 115개 입주기업이 가동 중에 있고, 9월 말 현재 40,848명의 북측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2009년 1월~9월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1억 7,673만 달러(전년 같은 기간 1억 8,648만 달러 대비 5.2% 감소)였으며, 수출액은 2,018만 달러(전년 같은 기간 2,897만 달러 대비 30.3% 감소)였다. 이에 따라 생산 개시 후 4년 9개월(2005.1~2009.9)간 누적 생산액은 7억 159만 달러이며, 2005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억 1,63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금강산관광사업은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지난 해 7월 12일부터 중단된 채 재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북측에 요구해 왔으나 이에 대해 북측 당국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명승지개발지도국 담화(7.12)를 통해 관광객 사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으나 우리 측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시하는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금강산관광사업의 조속한 재개는 어려운 실정이다.

2010년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남북경협은 어느 정도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연계되어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2010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남북관계 및 북핵 문제의 진전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핵문제 해결에서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의 진전은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이 경우 남북한 거래에서 비상업적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 쌀, 비료 지원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남북교역(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남북관계가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10년에도 2009년 수준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협력사업은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확대될 수 없고,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의 중단, 입주기업의 운영상 차질 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남북관계 경색으로 2009년에 개성공단사업 관련 물자와 장비의 반출 감소를 경험하였다. 남북경제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개성공단사업의 향배에 따라 전반적인 남북경협이 진전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북한 핵문제 및 남북관계에서 2009년과 같은 상황이 2010년에도 지속된다면 개성공단사업의 위축으로 전반적인 남북경협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다.

- 최수영·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사회·문화교류분야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나타난 대북정책기조의 변화와 북한핵문제의 지속 등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전반적인 기조에서는 과거의 대북정책과 본질적으로 차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구사에 있어서 ‘북

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문제의 해소와 북한이 '갑'이 되는 남북 관계의 수정을 시도함으로써 과거와 다른 시도를 해왔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대남강경책으로 대응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문화분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교류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과거와 달리 현저한 감소세를 보여왔다.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의 경우 교육학술 81건(827명)과 문화예술 28건(271명) 등 총 340건(7,377명)의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추진되는데 비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의 경우에는 교육학술 57건(663명), 문화예술 14건(46명) 등 총 182건(1,886명)으로 큰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2009년의 경우 5월의 북핵실험은 사회문화교류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쳐 상반기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남북교류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큰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정부는 금강산 시설관리인력과 개성공단 관계자를 제외한 민간인 방북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했으며, 이 조치는 7월 말 인도적 대북지원단체들에 대한 선별적 방북허용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었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9월의 동북아교육문화재단의 평양과기대 준공식 참석(평양, 9.16)이 2차 북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성사되었으며, 이때까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2009년의 경우 남북사회문화교류는 9월 말 기준 교육학술 7건(76명), 체육 2건(23명), 종교 3건(25명) 등 18건(153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남북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협력사업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은 참여정부 시기에 총 121

건이 승인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협력사업의 경우 2008년 승인된 3건, 협력사업자 1건을 제외하고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승인된 3건의 협력사업의 경우도 과거사업의 재승인 등 실질적으로 신규 협력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2009년의 경우 10월 말 기준 한 건의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가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의 전반적 경색과 아울러 남북사회문화교류에 있어서도 진전된 상황이 마련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0년 남북사회문화교류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 모두 일정한 관계의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수준의 남북교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에 있어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대북지원의 증가와 아울러 사회문화교류의 정상화에 있어서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 조한범·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4. 인도주의 사안

가. 대북지원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도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 제공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하여 왔다. 그렇지만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과 비료지원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정부차원에서 식량과 비료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민간단체는 자체 재원과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중심으로 대북지원을 제공하였다. 그렇지만 북한 핵실험에 이은 유엔 안보리결의안 1874호의 채택 등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 2008년의 경우 개별사업, 합동사업, 정책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금년도에 정책사업과 영유아 지원 사업에 추가로 기금이 지원되지 못하였다. 개별사업의 경우 총 45억 2,2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었으나 작년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다. 그동안 개발지원 확대에만 치중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직접적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 기여도, 시급성, 지원효과 등을 기준으로 약품, 식량 등 영유아,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기금대상 사업이 선정되었다. 1차로 8월에 10개 단체 35억 7,300만원, 2차로 10월에 5개 단체에 총 9억 4,900만원의 기금이 제공되었다. 북한의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와 로켓 발사, 핵실험 등으로 인한 신변안전을 고려하여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과 대북지원 단체 인사들의 방북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1월 20일 정기 총회를 열어 지난해 6월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된 ‘북민협 공동규범’에 대한 회원 단체장들의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북민협의 공동규범은 대북지원의 원칙과 실시 기준, 지원물자의 분배 감시 강화,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9월 23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함께 나누는 세상’ 창립 출범식 축하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3원칙을 표명하였다. 첫째,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단 없이 추진한다. 즉,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셋째, 지원물자의 분배투명성 강화이다.

10월 16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10월 26일 북한적십자 측에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옥수수 1만톤과 분유 20톤, 의약품 등을 지원하겠다는 전통문을 발송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원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내년에는 대북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북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소한의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도 남북협력기금에 식량과 비료 지원예산이 책정되었다. 다만, 대규모 지원의 경우 핵문제 진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또한 일정량 이상의 대규모 지원은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이고 상호적인 태도가 고려될 것이다. 특히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게 되면 ‘비핵·개방·3000 구상’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농업,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남북 당국간 개발협력을 위한 논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식량지원을 위한 당국간 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미국의 지원에 비추어 분배투명성 수준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방향성이 유지될 것이다.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운용과 관련, 대북지원 단체들의 개발지원성 사업보다는 식품과 의약품 제공 등 북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수암·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나. 이산가족 문제

통일부의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4대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이다. 이산가족 상봉 실시 및 정례화 추진은 첫 번째의 세부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의 달성을 위하여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고령 이산가족의 상봉 및 고향방문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추진 방법이 제시되었다. 또 2008년 7월에 완공한 금강산 이산가족면

회소를 활용하여 상봉 규모를 확대하고 상시 상봉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기존 해결 방식을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입장과 과제는 2009년 상반기까지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속된 북한의 대남 강경정책으로 실효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2009년 8월 이후 북한이 대남 강경조치를 철회하고 유화적 태도로 전환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에서도 닫힌 문이 어느 정도 열리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추진했다.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는 8월 20일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에게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8.26~28)할 것을 제의했고, 북한 적십자회는 8월 25일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통해 이에 동의한다고 통보했다. 북측은 남측이 제의한 일정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북측이 2008년 11월 12일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직통전화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되었다.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다가서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 사업은 어떠한 정치적 사안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상시 상봉, 영상편지 교환, 고향방문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하며,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설정한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추석을 계기로 한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만을 협의한다는 입장으로 나왔다. 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회담 결과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하고 이산가족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남측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7년 10월 이후 근 2년 만에 열리게 되었다.

9월 26~28일 열린 1차 상봉행사에서는 남측 방문가족 97명과 동반가족 29명이 북측 가족 240명을 만났다. 이어 9월 29~10월 1일 열린 2차 상봉행사에서는 북측 방문 가족 98명이 남측 가족 429명을 만났다. 상봉행사 기간 중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는 북한 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상봉행사의 정례화, 서신 교환과 화상 상봉의 동시 추진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요번 이산가족 상봉은 북측에서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 재개한 것”이라면서 “남측에서는 화답을 생각해보지 않았으나”고 언급,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남측으로부터 물질적 대가를 받으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의 대남 유화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산가족 추가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10월 16일 개성의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실무접촉에서 남측은 2009년 11월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추가 상봉행사를 열고, 2010년 설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특별 상봉행사를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하여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

적 해결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반해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남측의 제안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북측은 남측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남측은 돌아가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쌍방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고 차기 접촉문제는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남측은 10월 26일 대북 통지문을 통해 우선 옥수수 1만톤을 지원하기로 통보하였다. 옥수수 구입비용과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약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북측은 11월 10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산가족문제는 12월 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회의장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독일, 헝가리 등 여러 유엔회원국에 의해서 당면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거론되었으며, 북한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국군포로·납북자 가족을 포함해서 남측에서 상봉을 신청한 인원은 12만 7,34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3만 9,000여명이 이미 사망했으며, 76%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이다. 앞으로 많은 고령자들이 가족을 상봉하기는커녕 소식조차 모른 채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가장 인도적인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2010년도에 이 문제들이 최소 일정한 수준에서나마 긍정적인 방향

으로 풀릴 수 있는 핵심적인 관건은 북한이 어떠한 태도로 나올 것인가에 달려 있다. 2009년 9월 26~10월 1일 간 근 2년 만에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북측은 남측에게 물질적 대가를 바라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과거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대북지원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북측의 이러한 행태는 2010년에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09년에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일정한 정도는 북측의 대남 및 대미정책에서의 전술적 변화 필요성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미·북관계의 상황, 북한 내부의 대남정책 요인 등의 변수가 이산가족문제의 진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도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및 정례화 추진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계속 남북관계에서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남측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상시적 운영을 실현시키기 위해 북측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원칙 견지, 유연한 대응’ 기조 위에서 북측의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것이다. 실제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북측이 대남 및 대미 유화 조치를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2010년 2/4분기에 북측의 식량 수급 상황과 연관되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또 설, 추석과 같은 민족 명절을 계기로 상봉행사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측은 「6·15 공동선언」 10주년에 즈음하여 다양한 대남 공세를 전개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전술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2010년 상반기 중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회담이 진행되면 남북관계에 상승 작용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측의 적극적인 정책에 따라서 이산가

족 상봉행사가 몇 차례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군포로는 560여명, 납북억류자는 500여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 문제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해결됐고, 납북자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극히 제한적으로 상봉을 수용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책무 수행이란 차원에서 정책의 우선과제로 다루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009년 11월 6일 국회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과거 독일(서독)이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기 위해) 했던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지만 그 방식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이 한반도의 상황에 맞는 대안으로 구체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나, 과거와는 달리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0년에는 이 문제에서 최소한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박영호·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다. 북한이탈주민 문제

2009년에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11월 말 현재 남성 626명, 여성 2,036명(76.4%) 총 2,656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로 인해 올 해 전체 입국자의 규모는 2008년 2,809명보다 약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도 2008년과 유사하게 태국 등 동남아국가를 통한 국내입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집

단적으로 밀입국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개인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서 동남아국가로 이동하게 되며, 단독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동남아국가들에서 밀입국으로 체포되더라도, 대부분 현지국의 처벌을 거친 후 제3국 추방의 방식으로 국내로 입국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 특성을 보면, 이미 한국에 입국한 가족들의 권유에 따라 중개인들의 도움을 받아 입국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장기 체류여성들의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던 북한이탈여성이 한국입국 이후 중개인을 소개하며 국내입국을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1.21)됨에 따라, 7월부터 중국 등 제3국 체류기간이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정착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09년에는 장기체류 북한이탈여성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동반하고 입국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밀입국 이후 장기간 위조된 신분으로 생활하다가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태국으로 밀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태국정부는 태국주재 북한대사에게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태국유입을 막아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1.30)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외무장관은 북한대사의 평양 방문초청을 밝히면서, 1978년 북한기관원에 의해 마카오에서 납치된 태국인의 행방 확인을 요구하였다. 태국은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로 인한 부담으로, 태국유입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이 아닌 밀입국자로 간주하여 벌금을 물리거나 벌금액수에 해당하는 기일만큼 구류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은 북한이탈주민들을 강제 북

송하지 않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3국 정착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09년 초기에는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경경비가 강화되고, 금융위기로 인한 가족들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이동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기도 하였다. 미국의 대북인권특사는 미국 재외공관의 탈북자 처리지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여 왔으나, 미국 정착희망자의 경우 대기 기간이 한국입국자에 비해 현저하게 장기화되는 현실은 2009년에도 지속되었다. 태국에서 미국행을 희망하여 4년여 간 체류하던 북한이탈주민의 미국 입국(3.19)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캐나다의 탈북자 수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에 부각되었던 영국 등 유럽연합국가 내 탈북자 망명신청의 규모는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망명 허가 과정에서 국내로 재이주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망명이 거부되어 노르웨이, 스위스 등 관련 국가들에 의해 한국 재이주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정부는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국내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 망명신청을 한 경우 정착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에서 탈북중개 관여로 수감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이민법원이 기존 판결사례를 번복하고 탈북자지원 수감경험을 가진 조선족에게 ‘정치적 박해’를 근거로 망명을 판결(3.28)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 북한에 납치당한 조선족이 지난 10여년 동안 200여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탈북자연합단체에 의해 제기(11.16)되었다. 중국은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를 이유로 조선족들의 납치문제에 대해 송환요구 및 항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는 탈북자들의 시위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회도 정기보고서(11.13)를 통해 중국 내 탈북자들이 강제복송 및 인신매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정부에 ‘탈북자 전담반’ 설치를 건의하였다. 박선영 의원은 탈북중개인에 의한 성적유린 및 금품갈취 등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1.15)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센터가 시범 운영되었으며, 2010년에는 30개의 하나센터가 지역에 개설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하나센터 개설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하나센터에 전문상담사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에도 가족 및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로 입국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출산 자녀를 동반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입국도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태국 등 동남아국가를 통한 국내입국이 주를 이루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들의 연쇄입국과 함께, 가족단위의 입국 시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후 강화된 북한 내 탈북 관련 처벌도 2010년에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화폐개혁 이후 일부 국경지역 주민들의 탈북시도가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북한당국의 탈북자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가족들의 추방 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 금지 및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국내의 민간단체들의 활동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탈북 중개인들에 의

해 이루어지는 인권유린에 대한 관심과 처벌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이주의 규모는 감소할 것이나, 국내입국 사실을 숨기고 제3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금순·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라. 북한인권

지난 2009년 12월 7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첫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는 167개의 권고사항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12.9)하였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고 인권상황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비롯하여, 사형제 유보 및 공개처형 중단, 북한 주민의 국내 및 국외 여행의 자유 보장,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 중단 등의 50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북한은 나머지 117개 권고사항인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방북, 그리고 고문방지협정(CAT)과 인종차별철폐협정, 이주자권리협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국제협약에 대한 일반적인 가입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북한은 우리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통신 그리고 상봉 정례화 등을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들은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어온 북한의 인권탄압이 2009년에도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선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적하여 왔다. 비릿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1.28)에서 공개처형이 사라지지 않는 등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은 예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또한 북한에선 현재 800만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기구의 식량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그는 외부로 부터의 지원을 북한당국은 군사비와 핵무기 개발에 돌리고 있는 현상이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조기구에 의한 지원은 주민의 최우선으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2.26). 또한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3.20~21)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는 국제사회가 그동안 북한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 특히 아동들에게 제대로 배분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군대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식량문제 외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제조자들이 겪는 인권학대가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수감된 정치범들은 영양실조로 죽기 전까지 하루 12~15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의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탄압실태를 전하였다. 또한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최악의 식량부족에 직면한 가운데 구금과 사형,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다”(7.22).

결국 2009년도에도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유엔인권이사회는 물론이고 유엔아동권리

위원회(1.23)는 북한정부가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심의에서는 북한시민사회의 활동부재 등을 비롯하여 북한의 여아와 장애아, 탈북했다가 송환된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북한대표단은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 전면부인을 하는 태도를 취했다. 30일에 공개된 최종 권고안에서는 아동에 대한 군사교육문제가 처음으로 권고사항에 포함되었으며, 여전히 북한 내 시민단체들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남한 내부에서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초(1.15) 북한인권개선을 특별사업으로 선정하고 여성인권과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남한정부는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대북결의안 상정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3.20)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입각하여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증진세미나(9.16)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 주민을 돕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외통위 산하에 북한인권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국회차원에서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10.26)하였으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박진 위원장은 12월 3일 당내 중진의원 모임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언급하였다.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발효되었고, 2005년에는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그 이듬해인 2006년에는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법안 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북한인권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상당한 우려사항(something of concern)이라고 말하는 등(1.30), 북한의 인권문제가 미국정부의 대북정책 리뷰의 일환으로 재검토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국무부가 발표(2.25)한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아주 나쁜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한편, '적극적인 인권정책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시사하였다. 북한인권특사에 로버트 킹 전 하원 외교위원회 국장에 대한 인준안이 미 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11.23)한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특사임명은 부시 정부의 특사였던 레프코위츠와는 달리 대사급에 상근직으로 위상이 높아져 오바마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북협상과 제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킹 북한인권대사를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주도하는 스티븐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팀의 일원으로 참여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북 양자대화에서 핵문제 외에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미국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킹 후보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정부에 대해 탈북자 추방과 강제복송을 하지 말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11.5).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시도들은 민간기구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유럽연합(EU)과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남한 내 민간 대북방송 세 곳(자유조선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에 3년간 총 4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협약식을 가졌다(3.24).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4월 미국 방문시 민간 대북방송의 국내송출을 허용하겠다고 미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속하였다. 또한 미국의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한 민간 언론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밝혔다(7.16). 이에 따라 국내 민간 대북방송국인 자유북한방송을 비롯한 3개 방송단체는 물론이고 북한 뉴스 전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NK』 등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남한 및 국제사회의 노력은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남한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축조심의회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11.27)하였으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외교통상부에 국제사회와 북한인권문제를 협의할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게 되고,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집권 초반기 이명박 대통령이 향후 대북정책은 북한정부는 물론이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북정책을 표방하였던 만큼,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핵문제와 더불어 북한인권문제도 대북정책의 주요 사안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남한정부의 태도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대북관계 진전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북한인권법 발의 실무를 맡았던 로버트 킹이 북한인권특사에 임명된 것은 물론이고 그

의 행보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북한인권 보편적 정례검토가 열린 제네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의 권고사항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언급하였고, 내년 도에도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로부터 제기되고 압력이 가해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은 2009년도에도 선별적으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행태는 지난 12월 9일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내용 및 북한 측 회신을 토대로 작성되고 채택된 결과보고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당국의 반발 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도 갈등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현재 민주당의 반발로 본회의에서 원활하게 통과되기는 힘들게 보여진다.

- 홍우택·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부록: 2009년 주요 사건일지

남북정세 일지

- 1.5 한국적십자사, 남북 적십자사 대화 추진
- 1.7 아천글로벌 관계자, 농수산물 교역 협의 방북(개성)
두라무역 관계자, 수산물 교역 협의 목적 방북(개성)
- 1.15 북핵 실사단(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 영변 핵시설 원자로
용 미사용 연료봉 처리문제 협의 위해 방북
- 1.17 북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대남 전면대결 태세 진입
- 1.30 북 조평통 성명,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
든 합의사항 등의 무효화 및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에 관한 조항들의 폐기 발표
- 1.30 정부, NLL침범 불용 발표
- 2.4-7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 남북노동 부문 교류 협의 목적 방북(평양)
- 2.7-11 IT 방탄단 방북, 정보기술 교류협력 및 도서 전달
- 2.24 북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광명성 2호 발사 준비 사실
발표
- 3.1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를 통해 조건 없는 대화 제의
- 3.2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대통령의 핵무기와 미사일, 평화적 공존·공
영·협력, 조건없는 대화 관련 언급 비난
- 3.4 북, 개성기업에 ‘근로기준’ 통보
- 3.5 북 조평통 대변인 성명, 한미합동군사연습 기간 동해영공 南민항기
안전 위협
- 3.9 북, 총 참모부 대변인 성명, 남북 군 통신 차단
- 3.9-20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 3.13 개성공단 통행 2차 차단
- 3.17 북, 개성공단 통행 승인
- 3.20 정부, 북에 ‘뭇자리용 비닐’ 지원 보류
- 3.21 군 통신 및 통행 재개
- 3.30 개성공단 우리 근로자 억류,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 ‘탈북책
동, 체제비난’ 등 혐의로 조사 개시
- 4.5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함경북도 무수단리)
- 4.6 이명박 대통령,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Initiative Security: PSI) 가입 적극 검토”
언급
- 4.18 북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남측 정부의 PSI 전면 참여 경고
- 4.19 정부, PSI 전면 참여 발표 시기 연기

- 4.21 남북 당국자 접촉(개성)
- 4.29 북 외무성 대변인, 제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강행의지 피력
- 5.8 북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담화, 8·15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 비난
- 5.15 북, 개성공단의 기존 법규와 계약 무효 선언
- 5.25 북, 제2차 핵실험 성공 보도
정부,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정부 성명’ 발표
- 5.26 정부, PSI 참여 발표
- 6.11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1차 실무회담 개최(개성)
북, 임금 300달러, 토지사용료 5억 달러 요구
- 6.19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 개최(개성)
- 7.2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3차 실무회담 개최(개성)
- 7.27 정부, 민간방북 ‘단계적 허용’ 방침 발표
- 7.30 북, 동해NLL 월선 南어선(800 연안호) 장전함 예인
- 7.31 통일부, 북핵실험후 민간방북 첫 승인
‘월드비전’ 7명, 사업장 모니터링·기술전수 차 방북
- 8.10-17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방북 및 현대-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 공동보도문 채택(8.17)
- 8.13 개성공단 억류직원 유모씨 귀환
- 8.15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제시
- 8.20 정부,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북, 12·1조치 해제 통지
- 8.21 정부, 연안호 송환 재촉구
- 8.21-23 김대중 대통령 서거 북한 특사조의방문단(김기남 조선 노동당 중앙위 원회 비서, 김양건 통일선전부장 등) 서울 방문
- 8.26-28 남북적십자회담개최, 정부, 이산가족 해결 3대 원칙 제시, 2개항의 합 의사향 채택
- 8.29 북, 연안호 선원 석방
- 9.1 경의선 육로통행 정상화
- 9.6 북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 방류, 남측 민간인 6명 실종
- 9.7 북, ‘12·1조치’ 철회, 개성 남북경제협력사무소 재가동, 임진강 수해 관련 국토해양부장관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 9.16 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개성공단관리위원회 월 최저노임 전년도 5% 인상 수준 합의
- 9.23 이명박 대통령,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제안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립과 관련한 합의서’ 체결

9.26-10.1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10.12	정부, 북한에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및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북, 동해안 단거리 미사일 발사
10.13	남북 불교도, 통일기원 합동법회 개최(금강산 신계사) 북, 우리 정부의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및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에 동의
10.14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실무회담 개최(개성)
10.16	남북적십자 실무접촉(개성)
10.26	적십자사 대북인도적 지원 전달, 옥수수 1만톤, 분유 20톤, 의약품 등 지원 의사 대북통보
10.28	정부, 북에 남북 육로통행 관리에 사용되는 군통신 현대화 장비 제공
11.3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개최(개성)
11.10	북한경비정 대청도 인근 NLL침범, 서해 3차 교전
11.26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 합의
12.12-22	남북 해외공단 합동시찰
12.18	정부,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 북에 전달

동북아정세 일지

1.12	아소 다로 일본 총리 방한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서울)
1.20	버락 오바마 미국 44대 대통령 취임
1.22	한·러 양국 해운협정 문안 합의 및 가서명(모스크바)
2.5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 북의 2006년 핵실험을 ‘핵무기(nuclear weapon) 폭발’로 표현
2.15-22	클린턴 미 국무장관 일본,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순방
2.18-20	세친 러시아 부총리 방한 및 국무총리 예방: 에너지 자원분야 한·러간 전략적 협력 증진방안 협의
2.19-20	북핵 6자 동북아 안보회의 개최(모스크바)
2.20	미, 대북특사에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 임명
2.24	미·일 정상회담 개최(워싱턴)
2.25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베이징)
3.12	한·러 제9차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
3.25-27	천빙더 중국 군 총참모장 방한
4.2-3	제2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개최(런던)
4.4-7	리창춘 중국 정치국상무위원 방한
4.5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 4.10-12 제12차 ASEAN+3 정상회의 개최, 제4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파타야)
- 4.11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파타야)
- 4.1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의장성명 채택
- 4.20 샘 브라운백 미 상원의원, 북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제출
- 4.23 한·미 군고위급 회담
- 4.23-24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평양 방문
- 4.25-29 박의춘 북한외상 방중
- 5.4 북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비난 회견
- 5.7-12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한·중·일 방문
- 5.25 북한의 제2차 핵실험
- 5.26 한국 정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 발표
- 한·중 국방장관회담 개최
- 5.27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 5.30 제8차 아시아 안보회의의 한·미 국방장관회담 개최
- 6.2-5 미 정부대표단 방한(대표: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장관)
- 6.1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1874호(Resolution 1874) 채택
- 북 외무성 성명,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배경 및 3개 대응조치 선언
- 6.16 한·미 정상회담 개최(워싱턴),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발표
- 6.28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쿄)
- 7.7 미·러 정상회담 개최(훗카이도)
- 7.1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북핵과 미사일 관련 제재대상 선정
- 7.18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방한, ‘투 트랙 전략’을 골자로 한 대북정책 입장 표명
- 7.22 아세안 연례 외교장관회의의 개최(푸켓)
- 7.23 제1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개최(푸켓)
- 힐러리 장관, 포괄적 패키지 관련 입장 표명
- 북, ARF회의에서 6자회담 종료 주장
- 7.28-29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최
- 8.4-5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여기자 2명 석방
- 8.15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광복 64돌 기념 축전 교환
- 8.17-19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북
- 8.17-27 한·미 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실시
- 8.22-23 김대중 대통령 조문 특사 자격, 탕자쉬안 중국 전 국무위원 방한
- 8.24-28 한·중지도자 포럼 대표단 방중
- 8.26-29 이샤예프 러시아연방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방한
- 8.30 일본 총선 실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 9.6 보즈워스 대북특사 방한

9.10	제5차 한러 극동 시베리아 분과위원회 개최(극동 하바롭스크)
9.14	다이빙귀 중국 국무위원 특사로 방북
9.16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 출범
9.21	이명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중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제안(뉴욕,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KS), 아시아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 오찬)
9.23	한·중 정상회담 개최(뉴욕)
9.24-25	제3차 G-20 정상회담 개최(미국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
9.28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상하이)
10.4-6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북(북·중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10.9	한·일 정상회담 개최(서울)
10.10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베이징), 한·중 양자회담 개최
10.22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과 전략권 전환 계획 및 한미동맹 점검 등 16개항의 공동성명 채택
10.24	리근 외무성 미주국장, ‘동북아 협력대화’ 참석차 방미 시 성 김 미 북핵특사 비공식 회동(뉴욕)
10.24-25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후아힌)
10.30	윌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급변사태 발생시 미국이 북한의 WMD 제거 언급
11.11	미 국무부,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계획 발표
11.13	미·일 정상회담 개최(도쿄)
11.17	미·중 정상회담 개최(베이징)
11.19	한·미 정상회담 개최(서울)
11.20	중국 국방장관 량광리에 방북
11.24	북·러 국회의장회담 개최(미르노프 러시아 연방 상원의장-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12.4	후텐마 기지이전 미·일 장관급회의 개최
12.8-10	보즈워스 특별대표 일행 방북,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회동(9일)
12.11-15	보즈워스 미 특별대표 한·일·중·러 순방
12.12	오자와 이치로 일본 간사장 방한
12.16-19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 방한

북한정세 일지

1.1	2009년 신년공동사설 발표
1.7	신년공동사설 관철 군중대회

- 1.10 원산청년발전소 준공식
- 1.14 노동적위대 창건 50돌 중앙보고대회(인민문화궁전)
- 1.17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 등을 선언
- 1.23 김정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면담
- 1.31 조선노동당 출판사,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 개최
- 2.10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2.11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교체(인민무력부장에 북한군 차수 김영춘, 총참모장에 대장 이영호 임명)
- 2.15 김정일의 67회 생일 기념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평양체육관) 및 각종 경축행사 개최
- 2.16 김정일, 67회 생일
- 2.24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대변인, “광명성2호발사준비본격진행” 담화 발표
- 2.26-27 제4차 전국 선동원 대회 개최
- 3.4 북·쿠바단결위원회 연차회의 개최(평양)
- 3.5 조평통 대변인 성명, 민간항공기의 항공안전 위협
- 3.7 ‘3.8국제부녀절’ 99돌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 3.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 실시
- 3.11 외무성대변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훈련 비난
- 3.12 김두남 인민무력부 부부장 사망
- 3.13 서해지구, 철광역-은룡광산 사이 새 철길 부설
- 3.14 북적십자 대표단(단장: 김진범 중앙위 부위원장) 방중
- 3.18 김영일 총리·원자바오 중국 총리,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 및 ‘북·중 총리회담’ 참석
- 3.20 김영남 상임위원장·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만수대의사당에서 유럽의 회 사회당그룹 대표단과 담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개최 발표
- 3.21 유럽동맹 트로이카대표단(단장: 이리 슈틀레르 체스코외무성 아시아 태평양지역 담당국장) 평양방문
- 3.23 박의춘 외무상, 유럽동맹(EU) 트로이카 대표단과 담화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 선전교육일꾼 대표단(단장: 웬반화) 방북
노동당 대표단(단장: 김태중 당 부부장), 멕시코 노동당 전국조정위 당수 면담
- 3.24 외무성대변인 담화 발표, ‘안보리’ 제재시 6자회담 파탄 위협
- 3.25-28 6.15공동선언실현 민족공동위 북·남·해외 위원장회의 개최
- 3.28 경제대표단(단장: 리명산 무역성 부상), ‘북·베트남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7차 회의 참가차 베트남 방문
- 3.31 홍성남 함남 당 책임 비서 사망

- 4.5 조선중앙통신, 인공위성 ‘광명성-2호’ 발사성공 및 정상궤도진입 주장 보도
- 4.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개최,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
- 4.10 태양절 맞이 제26차 4월의 봄 예술축전(4.10-18) 개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관련 인민무력부 경축대회 개최(전승광장)
- 4.11 김정일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주석단 참석 및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
- 4.14 김일성 출생 97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평양체육관)
- 4.22 제24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평양 3대혁명전시관)
- 4.23 북·러, ‘2009-2010년도 문화 및 과학교류계획서’ 조인(평양)
- 4.24 조선중앙통신사, 미 억류기자(여,2명) 재판회부 결정 보도
- 4.25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문화회관) 박의춘 외무상, 비동맹운동 조정위 장관급 회의(쿠바) 참석차 평양출발
- 4.27 군 창건 77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주석단 발표
- 4.27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 임업분과위원회 제13차 회의 의정서 조인
- 4.28 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베트남 방문
- 4.29 외무성대변인 성명, 유엔 ‘안보리’ 국방공업 분야 3개회사 제재 사죄 및 결의결정 철회요구 및 추가 핵실험 경고
- 4.30 체신성 대표단(단장: 심철호 부상) 베트남 방문
- 5.1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일꾼 대표단(단장: 김형준 부위원장) 평양도착
- 5.1 5·1절 경축 축포야회(평양 보통강반) 개최
- 5.4 제11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인민문화궁전, 5.4-5) 개최
- 5.8 박의춘 외무상, 페루대통령 예방
- 5.10 김영남 상임위원장,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자코브 겐들레이홀레키사 주마)과 회담
- 5.11 박의춘 외무상, 브라질 외무상과 회담
- 5.11 김영남 상임위원장, 잠바브웨 대통령과 회담
- 5.11-14 제1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최(3대혁명전시관)
- 5.14 중앙재판소, 억류 미국기자들 6월 4일 재판 결정 ‘보도’ 발표
- 5.15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친선대표단(단장: 송은루 부비서장) 방북
- 5.19 H1N1형 신종플루 방역사업 실시
- 5.20 최고인민회의 대표단(단장: 최태복 의장), 인도네시아 국회대표단과 회담 개최(만수대의사당)
- 5.21 조선노동당, 브라질 노동당대표단과 회담 개최(평양)
- 5.25 김정일 위원장,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소식에 유가족들에게 애도 표명, 제2차 핵실험

- 5.29 외무성 대변인, “안보리 대북제재 철회 요구 및 안보리 도발시 추가 자위적 조치 취할 것” 경고 담화 발표
- 6.1 2차 핵실험 성공 경축 군중대회 개최
- 6.8 중앙재판소, 역류 美기자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 선고
- 6.10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 신종플루 예방사업 실시
- 6.13 외무성 성명, 유엔안보리 ‘결의1874호’ 배격 및 3개 대응조치 선언
- 6.16 대북제재 반대 평양시 10만 군중대회 개최
- 6.19 김정일 혁명사적비 준공식(대안친선유리공장)
- 6.20 군사대표단(단장: 백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몽골 방문
- 6.22 리혁철(김정일 1호 통역원), 이집트 대사로 임명
- 6.23 북·라오스 외교관계설정 35돌 기념집회 및 영화감상회 개최(대동강 외교단회관)
- 6.25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김일성광장)
- 6.26 리광호 당 과학교육부장 사망
- 7.8 김정일 위원장, 김일성 사망 15돌 관련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 7.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제사공장’을 ‘김정숙평양제사공장’으로 개칭
- 7.18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7.2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61호’ 발표, ‘식료일용공업성’ 신설
- 7.26 조국해방전쟁승리 5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4.25문화회관)
- 7.31 여원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 사망
- 8.4-5 클린턴 미 前대통령 방북
- 8.5 김정일 위원장, 미 여기자 석방 명령하달
- 8.8 태중수 내각 부총리, 함경남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
- 8.10 외무성 대변인, ‘나로호’ 발사 관련 기자회견
- 8.16 김정일 위원장, 현대그룹 회장 접견
- 8.17 북 조선아태-현대그룹 ‘공동보도문’ 발표
- 8.17-21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일행 방북
- 8.19 김정일 위원장, 故김대중 전 대통령 유가족들에 조전 발송
- 8.22 평양 창전네거리 ‘최초 태양빛전지가로등’ 시범설치
- 8.24 김 위원장 선군혁명영도 개시 49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4.25문화회관)
- 9.1-3 전국농기계전시회 개최(황해북도 곡산군)
- 9.4 북, 플루토늄 무기화 완료 및 우라늄 농축 실험 성공 주장
- 9.6 임진강 황강댐 방류
- 9.10 전국인민소비품 전시회 개막(평양 중앙경공업제품견본관)
- 9.11 평양에 첫 러시아상품 전문상점 개점
- 9.15 북·중, 09-11보건의학과학분야 협조 집행계획서 조인
- 9.18 김정일 위원장,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특사 다이빙귀 외교담당국무

- 위원 면담, 후진타오 국가주석 친서 접수
- 9.19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첸리화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과 면담
- 9.20-25 박길연 외무성 부상, 유엔총회 제64차 회의 참석
- 9.21-24 제5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최(3대혁명전시관)
- 9.22 김정숙 사망 60돌 중앙추모대회 개최(평양체육관)
- 9.25 새로운 천리마 속도로서 '희천속도' 제시
- 9.28 베트남 정부의 대북기증 쌀, 남포항 도착 보도
- 9.30 남측 '그랜드 바겐' 제안 비난,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서 대북사업 재개
- 10.3 중국청년친선대표단(단장: 루하오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 제1서기) 평양 방북
- 10.4-6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북
- 10.24 몽골주재대사에 리철광 임명
- 10.27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10.31 상하이 세계박람회 준비위 구성
- 11.9-12 프랑스 대통령 특사 자끄 랑 일행 방북
- 11.16 만수대창작사 창립50돌 기념 보고회 개최(인민문화궁전)
- 11.17 중국해안에서 조난당했던 북무역집배(지성5호) 선원들, 특별비행기 편으로 평양 도착
- 11.22-25 량광리에 중국 국방부장 방북
- 11.30 화폐개혁 공식 보도
- 12.8-10 보즈워스 미 특사 방북
- 12.15 12.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9호 발표
- 12.21 북·브라질 '무역협정 수정의정서' 조인(평양)
- 12.21-23 김정일 군 최고 사령관 추대 18돌 경축 행사 개최
- 12.30 체육과학도서관 완공(평양 장춘거리)

연구총서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11)-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0,000원
2007-15(11)-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4	東北亞區域合作的新關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저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저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저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공저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의교의 방향	홍우택 외 공저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저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공저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공저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저	20,000원
2009-16	200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학술회의총서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변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협동연구총서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화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공저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공저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공저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공저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공저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공저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공저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공저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공저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공저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공저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공저	20,000원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도 동향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근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스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근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근,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공저
2009-02(I)	1)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공저
2009-02(II)	2)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공저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공저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6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월간 북한동향

비매출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출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근, 정영태, 조민, 조정아
------	----------------------	-----------------------------

Studies Series

비매출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rn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P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a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 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시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9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
2009~2010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